

Russia Policy Review
ISSN 2586-100X

2018

Vol.2 | No.2 Summer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북미 정상 회담 결과에 대해

러시아의 대학 교육 개혁

남북 정상회담 평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결산

북한의 평화 공세: 한반도의 대결 구도 약화를 초래할 것인가?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와 트럼프 요인

중국의 신(新)시대 : 부(富)에서 강(強)으로

중국: 헌법 개정의 외적 배경

서구 주도의 러시아 제재와 일본의 참여, 그리고 러일 경제관계

아태지역 통합 문제와 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ussia Policy Review

2018

Vol.2 | No.2 Summer

『러시아 폴리스 리뷰』는 러시아의 시각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의 국제문제 및 정책 연구자들에게 러시아의 시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방향성, 전문성, 확장성을 지향하는 선별된 자료를 소개해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책저널이다.

Russia Policy Review

통권 제5호 2018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편집인 /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편집 및 운영위원 /
바실리 미헤예프(MEMO)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김현택(한국외국어대학교)
손성환(前주스웨덴 대사)
홍완석(한국외국어대학교)
황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번역위원 / 서유경(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주 소 /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전 화 / 031-330-4852
팩 스 / 031-330-4851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us.or.kr>

디자인·편집 / (주)이환디앤비(02-2254-4301)
인쇄인 / 송용수
인쇄처 / (주)이환디앤비
ISSN 2586-100X
비매품

※ 본 잡지의 내용을 허가없이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북미 정상 회담 결과에 대해
올레그 다비도프 | 3

러시아의 대학 교육 개혁
강덕수, 블라들렌 쿠구누로프 | 7

남북 정상회담 평가
올레그 다비도프 | 13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결산
올레그 다비도프 | 17

북한의 평화 공세 : 한반도의 대결 구도 약화를 초래할 것인가?
올레그 다비도프 | 20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와 트럼프 요인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24

중국의 신(新)시대 : 부(富)에서 강(強)으로
올가 보로호,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 32

중국 : 헌법 개정의 외적 배경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46

서구 주도의 러시아 제재와 일본의 참여, 그리고 러일 경제관계
비탈리 슈비코 | 51

아태지역 통합 문제와 전망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 | 57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북미 정상 회담 결과에 대해
러시아의 대학 교육 개혁
남북 정상회담 평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결산
북한의 평화 공세: 한반도의 대결 구도 약화를 초래할 것인가?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와 트럼프 요인
중국의 신(新)시대 : 부(富)에서 강(強)으로
중국: 헌법 개정의 외적 배경
서구 주도의 러시아 제재와 일본의 참여, 그리고 러일 경제관계
아태지역 통합 문제와 전망

이 저널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362-2009-1-B00005)

북미 정상 회담 결과에 대해

올레그 다비도프

북한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 간 이뤄진 정상 회담은 한국 전쟁 이후 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최근 25년간 양국은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는 등 그동안 양국 관계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우여곡절과 변화로 점철된 롤러코스터를 탔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북미간 상호 대립은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하고 '침략 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미 본토를 타격할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악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군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북미간 대립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외교적 행보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고,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북측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들과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미정상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급 광폭 외교 행보가 이어졌다. 집권 이후 7년동안 단 한 번도 외국 지도자와 만난적이 없었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한달 사이 중국(베이징, 대련)을 두 번이나 방문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두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평양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을 여러차례 접견하고, 역시 평양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도 만났다.

북미 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다. 그 과정에서 북미 양측간 상호 비방과 날 선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 지도부는 담화문을 내고 북한에 일방적인 핵 폐기를 강요하는 미국측의 시도는 북한의 '분노와 적대감'을 초래할 뿐이며, 미국측이 '우리

를 공지에 몰아넣고자' 할 경우 북미정상 회의 개최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거리' 협상 파트너의 의지를 시험해보고자 했던 북한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기분이 상했고 김정은 국문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북한 측의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 당장 회담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 지도부는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서둘러 담화를 발표하고 대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한 적이 없으며 정상 회담은 북한과 미국간 '비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한국과 중국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 결정을 재검토하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 협상을 계속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미 회담의 내막과 관련해 애초부터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즉, 지난 20년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나 접촉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양국이 실무 차원의 접촉 단계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로 인해 현재 양측이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십년간 북미 양국간에 크고 작은 미해결 난제와 갈등 요인들이 너무나 산적한 상황에서 북미 관계에 수십년간 쌓여 온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양국간 갈등 요인을 규명하고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제아무리 가까운 국가 사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상황에서 내실 있고

유의미한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미 언론에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양국은 거의 모든 회담 의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까닭에,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은 매우 힘들게 진행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추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을 다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일처리가 애초부터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회담의 성과 여부를 떠나 미국 대통령을 만나 공식 회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역사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눈에 띄지 않는 긍정적인 성과가 반드시 필요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회담 전부터 회담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퇴로를 준비했을 것이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이번 정상 회담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유난히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번 회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만나서 친분을 쌓고, 관계를 형성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고, 향후 양국 관계의 '장애물 제거'를 위한 후속 작업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일은 전문가들에 맡기면 된다는 얘기다.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는 사실상 북한 핵과 미사일 운명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단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북미 양측이 이 문제의 개념과 비핵화 이행 과정 자체를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엘리트들은 그들이 자유주의 진영이든, 보수주의 진영이든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바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원칙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는 '리비아식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했던 발언으로 인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태가 불거진 이후 미국은 일괄타결식 핵 폐기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북한 비핵화에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할지도 모르며, 그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하기 시작했다(미국의 권위있는 북핵 전문가들은 그 기간이 대략 10년에서 15년까지 걸릴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는 변함이 없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모호하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핵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핵 문제를 논의하자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정말로 특이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북한 지도부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는 사실 자체라는 것이다. 비핵화라는 미끼를 던지고서 말이다. 그리고 '미끼'에는 김정은이 선언한 핵실험의 전면 중단과 ICBM 시험 발사 중단, 북핵 개발의 상징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 이슈를 언급할 때마다 북한 지도부가 이는 북한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즉, 북핵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 평화적 신뢰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여기에는 무엇이든 다 포함될 수도 있다. 즉, 대북 제재 중단, 한반도에서 군사 훈련 중단, 주한 미군 철수,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핵 우산 제거, 경제 원조 제공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현 단계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이상적 해법은 인도식 모델에 따라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즉, 평화적 핵과 군사적 핵을 모두 보유하며, 핵 보유국으로도 인정받고 대미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이라는 예측불가능하고 호전적인 나라를 또 하나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회담 참가자들이 북미 정상 회담의 결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토록 서로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의 회담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왠지 급조된 연출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금할 수가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은 매우, 매우 훌륭했고,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김정은 위원장과 멋진 관계를 맺었다," "우리는 대단한 진전을 이루었다," "화해를 위한 좋은 출발을 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면 더욱 그렇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았다. 그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언급하며 '발목을 잡는 과거와 오랜 관행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의 이같은 과대 평가로 포장된 발언을 듣고 있으면,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의 내용이 너무나 빈약해서 이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측

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기대했던 사람이라면 이 합의문에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포함한 미국측의 대응 조치를 이행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속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 북한의 비핵화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돌발 발언은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 그 어떤 합의도 이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기자 회견에서 “비싸고 도발적이며 부적절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미 알다시피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에 대한 공격 준비로 간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 발언에 대해, 이에 대한 해명을 기대하는 한국 지도부와 주한 미군 사령관을 포함해 모든 이들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계 일부에서 ‘세기의 회담’이라고까지 불렀던 이번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정말 이상한 행사로 막을 내렸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말하듯이,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사실상 눈에 띄는 결실을 얻어내지 못한 회담이었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나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결국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북한 김정은이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 대등하게 회담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는 데도 성공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지도자는 올해 봄부터 위기에 처한 북한의 대외적 입지를 일시적으로나마 개선하기 위해 단계별 대규모 전술 작전에 착수했고,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행보에 그 어떤 근본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결코 진지하게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됐을 때 워싱턴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지 정말 궁금하다.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번역: 서유경, 한국외국어대 강사
youkyseo@naver.com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К ИТОГАМ САММИТА МЕЖДУ ЛИДЕРАМИ КНДР И США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8.6.14)

러시아의 대학 교육 개혁

강덕수, 블라들렌 쿠구누로프

2012년 가을 러시아연방 교육부는 502개의 국립대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1학년 신입생들의 수능 점수(EGE)와 학교 시설, 교수 논문 업적 등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평가를 통해 136개 대학이 비효율적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른 대학과의 통합을 통한 폐쇄 조치를 당했다.

‘2011-2015 교육 발전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에 의해 대학교들의 통합이 진행됐다. 통합의 기본적 이유는 러시아가 당면한 인구학적 위기에 있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연방대학교와 국립연구대학교에 편성되지 못한 대학들은 새로운 대학 네트워크로 재편됐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10년 간 두 가지 문제가 교육 분야의 현안으로 대두돼 왔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로 인한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감소,

두 번째는 세계화로 인한 대학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이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규모를 조정하고 동시에 대학의 통합을 통해 대학교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교육부는 대학 교육 시스템을 볼로냐 선언 체제에 맞게 개혁하고 교육 내용도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새로운 교과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볼로냐 선언(Bologna Process)은 고등교육의 수준과 내용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의 교육부 장관들이 만나 맺은 협정이다. 여기에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나라마다 자기 특성에 맞게 볼로냐 선언의 내용을 적용하면 된다. 러시아도 이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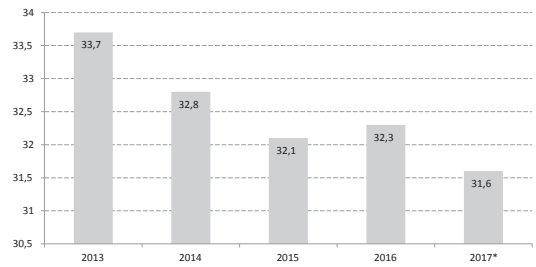
* 본 논문을 작성하도록 좋은 자료들을 수집해 보내준 러시아 연방 상원 헌법위원회 상담역 카리네 암바르추만(Karine A. Ambartsumjan) 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언에 조인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랫동안 나름대로의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 선언의 내용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히토프, D.R.(러시아 법학대학 카잔 분교 교수)와 코발코바, E. Ju.(러시아 법학대학 카잔 분교 조교수)는 볼로냐 선언이 세계적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학들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능력 본위의 교육을 유럽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15~20년 수행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상호 관련성을 조율하지 않고 2~3년 동안 수행한다. 이로 인해 능력 본위의 교육에 지식의 활용성(mobilization)이 강조돼 현실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죽은 지식’이 전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생각하고 주변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여러 나라에서 채택된 교육 기준을 바탕으로 필수적인 능력 배양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연방정부 분석센터(Analytic center)에서 2017년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당면과제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담보하고 대학 내에 개혁발전센터(Center of innovative development)를 세우는 것이다.

연방정부 교육과학부는 지방대학 개혁 2.0을 발표하여 대학교를 거점대학 중심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대학교 수는 25% 감소하게 될 것이다. 1단계 개혁은 10개 연방대학교를 구성하는 것이다. 2단계 개혁은 지방 대학교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인구학적 상황에 따라 대학 통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최근 대학

그림 1. 17-25세 젊은층의 고등교육 변화 추이(%)



Источник: Росстат, расчеты Анали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을 입학하는 11학년 졸업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2015년 초 이미 일부 통합대학들이 발표됐다. 모스크바 사범대학(MPGU)과 모스크바 인문대학(MGGU), 모스크바 항공기술대학(MATI)과 모스크바 항공대학(MAI), 마이모니드 국립고전대학(GKA)과 모스크바 디자인 및 기술대학(MGUCDT), 모스크바 정밀화학기술대학(MITXT)와 모스크바 정보기술대학(MIREA), 극동국립대학교(DGGU)와 태평양국립대학교(TGU), 오렌부르크 국립경영대학교(OGUM)와 오렌부르크 국립대학교(OGU)의 통합이 진행됐다.

연방대학교로는 2006년 크라스노야르스크 국립대학교를 기반으로 이 지역 3개 대학을 통합한 시베리아연방대학교가 제일 먼저 출범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은 2014년 크림 연방대학교이다.

2016년 발표된 “혁신주도센터로서의 대학교” 프로젝트(Проект ‘Вузы как центры пространства создания инноваций’)에 의하면, 2025년까지 세계 100대 학교에 러시아 대학교를 진입시키는 것이다. 2017~2020년 사이에는 5개 대학교, 2025년까지 10개 이상의 대학교

연방관구	대학교	위치	약칭	약칭
중앙관구	없음			
남부	남부연방대학교	로스토프-나도누	ЮФУ	sfedu
북서	발트연방대학교	칼리닌그라드	БФУ	bfu
북서	북부연방대학교	아르한겔스크	САФУ	nafu
극동	극동연방대학교	블라디보스톡	ДВФУ	dvfu
극동	북동연방대학교	아쿠츠크	СВФУ	nefu
시베리아	시베리아연방대학교	크라сно야르스크	СФУ	sfu
우랄	우랄연방대학교	에카테린부르크	УрФУ	urfu
볼가	카잔연방대학교	카잔	КПФУ	kpfu
북카프카스	북카프카스연방대학교	스타브로폴	СКФУ	ncfu
크림	크림	크림, 심페로폴	СФУВ	cfuv

를 이 범주에 진입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혁신기술사회발전센터(центр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를 연방대학교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7년에는 30개 연방 주체에 있는 40개 대학교에, 2025년까지는 80개 연방 주체에 있는 100개 이상의 대학교에 이 센터를 설치한다.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현대적 디지털 교육 환경'(Современная цифров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среда)을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e-러닝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7년 '러시아 교육 제도 수출 능력의 발전'이라는 프로젝트가 착수됐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들에게 러시아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을 인식시키고, 교육 기간 동안 외국인이 러시아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 교육의 브랜드 위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20개의 대학교에 외국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국제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2021년에는 이것을 모든 대학교에 확대하고자 한다.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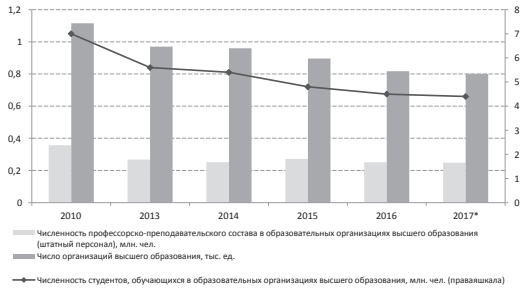
외국인 학생 수는 2만에 이른다, 2025년까지는 71만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온라인 수강생 수는 2017년 110만에서 2025년 350만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연방대학교를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 방향의 적정화, 구조 개혁과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 전공 단위의 축소화, 소규모 학습 그룹의 적정화, 교강사 임금의 적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도모하게 됐다.

교육 과정의 개혁으로는 과정의 다층화가 도입됐다. 이것은 블로냐 선언에 따라 석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소비에트 시절에 학사 이후 바로 대학원(aspirant) 과정에 입학하던 것을 학사 이후 석사 2년을 거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소비에트 전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공 영역에 따라 '전문학위'(specialist diploma) 과정을 유지할 수 있다.

러시아의 전반적 인구 감소 현상은 대학교 학생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생 수의 감소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림 2. 대학교 수, 교수 수, 학생 수의 변화



있다. 2016년 대학교 학생 수는 2013년에 비해 64%에 불과하다. 2019년에는 학생 등록수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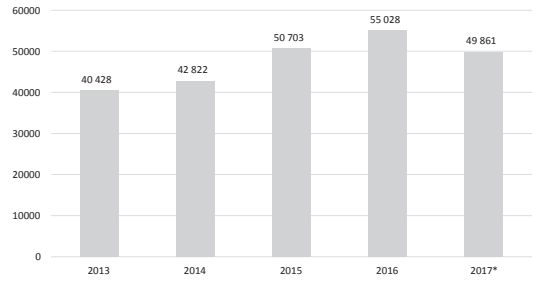
대학교에서 교수와 강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7년간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장 급격한 감소를 보인 것은 2013~2014년도였다. 교강사의 수가 감소하는 대신 월급은 다소 증가했다. 2013년도 교강사의 월급은 전년 대비 30% 상승하고,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약 9% 상승했다.

대학교 교강사의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4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체되고 있다. 대학교 교강사의 이직률은 2013년 18.4%이고, 2017년엔 이보다 1.2배 증가했다. 대학교 시스템의 개혁이 시작된 2013년 이래 대학교 강사의 나이가 현저히 젊어져 30세 이하가 1/10에 이른다.

대학교 교강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3년 국립대학교에서 교강사 1인당 학생 수는 약 11명이었다. 2015년 교강사 1인당 학생 수는 9.64명 이었다. 교강사 대비 학생수의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이것은 대학교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2015~2016학년도 대학교의 숫적 감소는 8.8%에 이른다. 국립 및 지방 대학교의 감소는

그림 3. 교강사 월급 평균



28개로 5.3%에 해당한다. 사립대학교는 51개로 13.9%가 감소됐다. 2013년 시작된 대학교 적정화 개혁에서 대학교의 비용 대비 학생수가 증가한 것은 대학교의 운영비용의 증가와 부담의 압박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7~2018 학년도 강좌 당 교육서비스 비용은 그 전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비용 보다 평균 2배 증가했다. 러시아연방 지역 주민들의 지불 능력에 비해 교육비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지역 주민의 평균 임금은 월 4만 루블(약 80만원)인데 비해 2017~2018년도 입학생의 교육비용은 학부생의 경우 13만 루블(약 260만원), 대학원생의 경우 16만 루블(약 320만원)이다. 부모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자비 입학생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0% 이상 감소됐다.

반면에 국가 장학금도 2005년부터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 2017년까지 장학금 지표는 14%까지 감소했다. 이것은 대학 입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져 2010년도 대비 2017년도 입학생 수는 12% 감소했다.

석사 과정 도입과 국제화에 관한 북동연방대학교 (NEFU)의 케이스

북동연방대학교(NEFU)는 학생 수가 약 2만 명 정도로 동부 시베리아의 거점대학이다. 이 대학교는 국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대학교에 도입된 석사 과정과 국제화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러시아 대학교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NEFU는 석사와 박사과정으로 대학원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2개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17년 135개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중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해외 자매대학들과 운영하고 있다.

1. 보하이 대학(중국)과의 공동 학사 학위 프로그램: '관광. 관광 경영'
2. 홋카이도 대학(일본)과의 공동 석사 학위 프로그램: '북극권의 지속적 발전'
3. 니즈 소피야 안티폴리스 대학(프랑스)과의 공동 학사 학위 프로그램: '경제학'
4. 엑스-마르세이유 대학(프랑스)과의 공동 석사 학위 프로그램: '지리학: 응용 지리정보학'
5. 짜무스 대학(중국)과의 공동 학사 학위 프로그램: '언어학'

2017년 NEFU는 헤이룽장 동양대학교(중국) 과 '2+2' 모델의 공동 학위 프로그램 '교육과 관광 분야 러시아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프로그램은 2018~2019 학년도에 시작될 것이다. 2018~2019 학년도에는 베르사이유 대학

(프랑스)와 '환경법'에 관한 이중 학위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이다.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NEFU는 석사과정에 영어로 강의하는 융합 과정을 2019~2020 학년도에 신설할 것이다. 이 과정의 목적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상품을 고안하고, 새로운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배출에 있다. 이와 더불어 창의적 클러스터, 비즈니스 지원 센터, 창의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는 물리학, 문화학, 경제학의 세 분야가 협력한다. '언어학'(주임 안상철 교수), '전략 경영'(주임 N.G. 치라예바), '교육학'(어학 교육의 평가, 주임 K.I. 표도로바)는 석사과정으로 완전히 영어로만 운영된다.

해외 대학들과의 협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한국)와의 협력으로 '스트레스 적응 유전자 이용을 위해 북부지역의 야생 유용식물 이용을 위한 식물의 분자생물학' 프로그램이 학제간 응용 석사 프로그램인 '세포 생명공학'(2017~2019 학년도)에 포함됐다.

외국 학생들을 리크루트 하기 위해 NEFU는 다양한 경시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NEFU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2017년 말 on-line 경시대회 '대한민국의 파트너 지역으로서의 북극 야쿠티야와 극동'을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대회는 NEFU의 기금과 한러 대화 포럼이 후원했다. 2017년 북극권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학제간 프로젝트 'Northern Challenge-Case: Yakutija'를 위한 제1회 경시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헤이룽장 동양대학교와 NEFU 기금의 후원, 러시아연방 극동 및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

지역 대학 연합의 지원으로 NEFU가 실시했다. 이 경시대회의 입상자들은 NEFU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는다.

다음 도표들은 2017년 러시아 대학교들에 대한 순위표이다. 연방 교육부는 매년 이와 같은 순위표를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림 4. 2017 러시아 대학교 교육 상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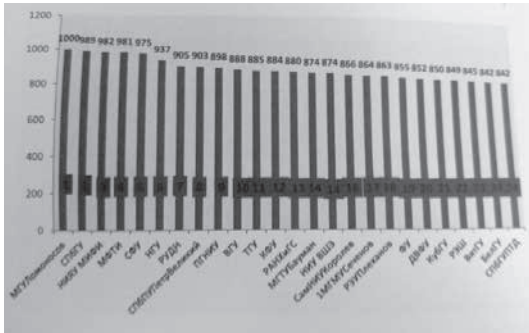


그림 5. 2017 러시아 대학교 연구 상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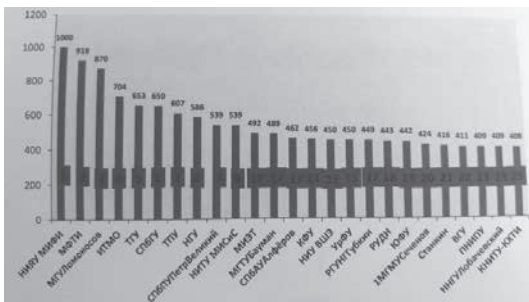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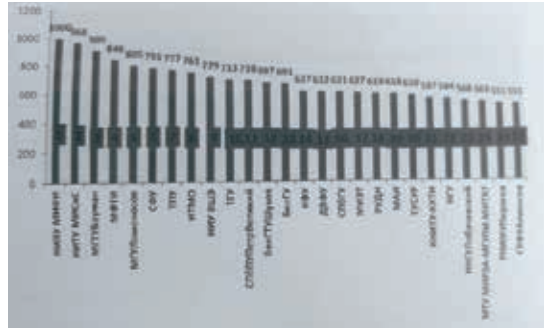


그림 6. 2017 러시아 대학교 개혁 및 기업활동 상위 25



참고문헌

-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форма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отечественный и зарубежный опыт, Бюллетень о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юнь 2017
- Вахитов, Д.Р., Ковалькова, Е.Ю.,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роблемы,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УДК 34.028.6
- Лейва, Мария. В России стартовал второй этап реформы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егионах. <https://www.rbc.ru/politics/29/06/2015>
- Федотова, Виктория. Советской системе аспирантуры вынесен приговор. <https://vz.ru/society/2017/12/8/898731.html>

·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러시아연구소장, 부총장
 · 블라들렌 쿠구누로프(Vladlen Kugunurov)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남북 정상회담 평가

올레그 다비도프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양국 군사분계선에 있는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은 그 시작부터 역사적인 순간의 연속이었다. 남북 두 정상이 이끌어낸 상징적인 순간들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과정에서 잠깐 동안 북측 땅을 밟아보도록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양국 의전상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이후 두 정상은 서로 손을 잡고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넘어왔다. 그리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 땅을 밟은 최초의 북한 지도자가 됐다. 회담장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수 십 미터 거리에 있을 뿐인데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진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의 마무리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환영 만찬 역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언론 보도만 봐도 양

국이 언제 철천지원수처럼 대립했든가 싶을 정도로 만찬 분위기가 시종일관 격의 없고, 화기애애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공존의 새 길을 열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북과 남이 함께 모인 자리인데 누가 북측 사람인지 누가 남측 사람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이 감동적인 모습이야 말로 진정 우리는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라며 “꿈만 같고 반갑다”고 화답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북의 ‘퍼스트 레이디’는 오랫동안 헤어졌다 상봉한 친 자매들처럼 서로를 포옹했다. 역사적인 만남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사랑받는 민요 ‘아리랑’의 합동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남과 북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의 행동 계획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하겠지만, 이 공동 선언문에서 가장 큰 관심은 정치, 군사 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 선언문은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양 측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도발적인’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이밖에 남북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선언문에 언급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한 고위급 회담 개최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
-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
- 남북 적십자회담을 재개하여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
- 서울-평양-신의주를 노선으로 하는 경의선 철도의 현대화를 비롯한 인프라 사업 개발

공동 선언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한다’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이 항목에 대해 다분히 회의적이다. 남북 양측이 지난 65년 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문제에 대해 이번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핵심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항구적인 평화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핵심문제란,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이 주권국가로서 상호 인정하고, 상

호간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다.

그런데, 바로 마지막 사안인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공동 선언문 조항은 너무나 짝막하고 모호하게 언급돼 있다. 합의문 내용을 써 있는 그대로 보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을 뿐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양측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미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측의 주동적인 조치들이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린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미사일 발사 기지 폐쇄와 같은 결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결정이 발표됐던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의 김 위원장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은 연설의 전체적인 요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과 무장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기에, 더 이상 핵실험이나 시험 발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발언을 보면 남북한이 비핵화를 두고 동상이몽을 꾸고 있으며,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효력도 알맹이도 없는 문구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신중론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대체 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판문점에 왔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핵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과거에 다양한 형식으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었지만, 남북간 대치 국면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

가 호전됐다가, 다시 적대 관계로 돌아서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남북 관계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체결된 합의문에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조항들이 많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2010년 연이어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해법은 북한이 가혹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가일층 심해지는 고통을 인내하거나, 아니면 상대 진영과 화해하고 제재 완화를 얻어 내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하는 '평화 창조자'의 가면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평론가들은 김정은이 전지전능한 '은둔형 지배자' 역할에 싫증이 나서 세계 무대로 나온 것이라고 진단하며, 그 목적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언급했던 '뚱뚱한 리틀 로켓맨'(short fat rocket man)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가 거침없는 대외 행보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그 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내막이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최근 이뤄진 중국 방문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양국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북한이 원하는 인도식 모델에 따라 미국과 '북핵 빅딜'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이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에 예정된 회담이 실제로 개최되는 경우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측 논리를 살펴보면, 북한이 앞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포기하는 대신, 혹은 더 나아가 북한의 핵 연구시설이나 관련 기반시설

을 없애고 향후 '핵 보유국' 지위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대가로 북한이 이미 개발된 핵과 미사일 보유는 기정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만약 위에 언급한 내용이 진정이라면, 그 동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인 핵 폐기' 외에 다른 방안을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이런 논리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번역: 서유경, 한국외국어대 강사
youkyseo@naver.com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К итогам межкорейской встречи в верхах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8.4.29)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결산

올레그 다비도프



사진 출처: 신화통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간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 북경을 비공식 방문했다. 북한의 '은둔형 지도자'가 해외를 방문한 것은 2011년 12월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여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방문이 최근 양국 관계가 상당히 냉랭해진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예상밖이라는 반응이다. 북한은 김정일 집권 이후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자신들에게 도발을 자제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고,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

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분을 삭여왔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양국 관계의 파탄을 운운하면서, 내부 체제 선전을 통해 북한을 '교살'하려는 미국의 노선을 사실상 지지하는 '수정주의자'이자 '타협주의' 열강이라며 중국을 원색적으로 맹비난했다.

그런데 지금 앞선 북한의 외교 정책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북경에서 들어오는 보도만으로 보면, 퍼스트레이디를 동행한 양국 정상들의 만남은 매우 따뜻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져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양국이 그 동안의 불편했던 관계를 모두 잊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첫 번째 공식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내가 북중간 우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김정은의 발언을 인용하며 전했다.

시진핑 주석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특수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이는 '위원장 동지와 북한의 노동당이 양국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국이 양국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고위급 접촉, 검증된 채널을 통한 대화, 평화적 관계 발전 및 강화라는 4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통적 우방과 미소를 주고받는 외교관계를 복원하거나 국제 정세에 대한 일반적인 대화나 나누려고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북한 지도자

는 4월과 5월에 이어질 문재인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바로 이 두 정상회담에 북한과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상외교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첫째,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든든한 후방을 확보하기 위하여, 둘째, 다가올 회담에 대한 '형님'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쌓였던 중국에 대한 불만을 덮어두고 중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뜻밖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자신을 찾아와 머리를 숙이며 정치적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그동안 서방 지도자들은 중국이 이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으며, 중국은 절대 북한의 핵 야욕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해왔다. 그런데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북중 정상이 만나 만천하에 양국 관계에 대한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자신들이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판세에 꽤나 인기있는 주력 플레이어이자, 적어도 북한과 상대 진영과의 협상에 중재자 역할 정도는 할 능력이 있음을 제대로 과시했다.

그러나 어찌됐든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접촉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정상회담이 예상과 달리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경험이 부족한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순간 자제력을 잃어 '재갈을 물어뜯고(인내심을 잃고)'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말이다.

한국 언론의 평론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직접 만나 비핵화 노선을 따를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갖가지 논평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어디에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약속은 찾아볼 수 없다. 북한 지도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시종일관 변함없는 북한의 입장이라고 오래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왔다. 하지만, 북한 지도자에게 핵무기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총서기의 귀중한 유산이기에, 그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수십년 동안 북한 지도자들이 조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호에 불과하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발언은 너무 모호해서, 그 진위를 놓고 온갖 해석이 분분할 정도이다. 신화 통신은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노력에 선의로 응답하여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실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다. 오로지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앞서 한국과 미국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암시만 있을 뿐이다.

어찌됐든, 김정은은 한국-미국과의 ‘정상 외교’가 시작되기 전에 북경을 방문하면서 이웃의 대국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성공하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정된 남북정상회담(4월)과 북미 정상회담(5월)에서 사실상 중국이 보증인 역할을 확보하도록 했다. 즉,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국은 간접 참여자로서 자기 몫의 명성을 챙기게 되겠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처할 경우 북한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일종의 ‘안전망’으로 중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서유경, 한국외국어대 강사
youkyseo@naver.com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К итогам пекинского вояжа лидера КНДР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8.3.29)

북한의 평화 공세 : 한반도의 대결 구도 약화를 초래할 것인가?

올레그 다비도프

모든 논리에 반하는 한반도 정세는 예기치 않게 180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한반도 현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격변이 지속성을 갖는 경우는 드물고, 시간이 갈수록 차츰 '원래대로' 돌아간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갑작스런 '평화애호' 공세와 그에 뒤따르는 사건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긴장을 해소하고 적대감과 정치·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지난 수년간 김정은의 집권 하에 남북 관계는 '결빙점'에 도달했고, 북한은 당연히 이것에 대한 책임을 오직 남한의 '친미괴뢰정권'과 해외의 '비호자들'에게 돌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이 남한 측에 대해 그토록 온기를 가지고 대한 것은 그가 집권한 이래 거의 처음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

여정을 포함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한을 다녀갔다. 김여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공식 초청했다. 주요 목적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와 남북통일을 향한 첫 시작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물론 한국은 이러한 제안을 즉각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중간 과정으로 김정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 결과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평양으로 출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특사단이 '평양의 은둔자'와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다. 김정은은 남측 대표단과 여러 시간동안 회담과 행사를 가졌다. 이것은 2011년 10월부터 시작된 그의 통치기간을 통틀어 김정은이 사실상 처음으로 외국 대표단과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사건이었다. 1박2일간의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는 강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느낌마저 준다. 어쨌든, 만약 대북 특사단이 전해준 정보를 신뢰한다면, 북한 지도부가 최근까지 확고부동한 것으로 여겨지던 정치적 지침들 중의 많은 것들을 실제로 완전히 재검토한 듯한 인상을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와 정상적인 국제관계 수립 문제에 대해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체제 안전보장이 확보된다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 외에도 김정은은 북미회담 기간 동안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격한 군사 행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회담 개최의 전제 조건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이 원하는 유일한 것은 '진지하고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받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두 핵보유국 지도자들의 만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몇 개월 전에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미국 전역과 일본 및 호주까지 포함해 미국의 동맹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무력의 질적 완성과 양적 증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맹세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결코 한국에 적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로 돌아온 대북 특사단은 4월로 다가온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민감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었다. 김정은이 직접 한국과 미국이 예년 수준의 군사훈련을 지속할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밝힌 것 같다. 만약

이 말을 믿는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 침략 준비 훈련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남북문제에 관한 의제로만 말하자면, 4월말에 판문점 남측 구역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 중요한 성과이다. 이것을 가지고 언론은 북한 지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형식적으로나마 한국을 방문한다고 대서특필했다. 그 외에도 '긴장 완화를 촉진하고 필요한 경우에 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만족스러워 할 수 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았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북미대화를 성사하기 위한 중재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울로 돌아온 후 곧바로 워싱턴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보고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워싱턴 방문의 주요 목적은 '대화를 위한 상황이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서는 주로 회의론적인 분위기가 우세했다.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확고부동한' 것 같은 자국의 전략을 쉽게 바꾼다는 것 또한 미국의 의심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남한과 북한에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했음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이 27년간 다양한 형태로 북한과 대화를 해온 경험이 있

지만, 북한 측의 통상적인 속임수로 끝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미국 국가안보 부서의 수장들도 이에 동조했다. 일례로, 국방정보국 로버트 에슬리 국장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이 그토록 쉽게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핵위협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국가의 존립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보기에 북한의 이러한 작전은 이상한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만드느라 국가 경제와 재정을 악화시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구체화되지 않은 ‘안전보장’을 대가로 이 모든 전리품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특유의 행동방식으로 이 모든 의견을 거부하고 올해 5월 말 이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진심’을 보이게 했으며, 이제 이 순간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미대화의 수락에 중요한 요구조건을 달았다. “모든 대북 대화는 그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분명하고도 변함없는 목표의 달성을 향해 나갈 것이라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인들도 의심을 품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표했다. 주된 반론은 북한이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내밀 때조차도 절대로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 대표들은 이전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2000년, 2007년)이 남북관계를 일시적으로 안정시켰을 뿐, 그 이후 다시 더 강한 대결구도로 되돌아갔었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상기시켰다. 어쩌면 지금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장기적인, 그러나 내용은 없는 대화에 끌어들이므로써 다음 핵·미사일 도발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적인 기만술을 쓰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체로 현재 북한이 제안하는 것에는 모호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며,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그간의 모든 경험은 북한이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공짜 선물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김정은이 미국에 약간의 양보를 하는 대가로 받고자 하는 값에 대한 것이다. (핵미사일 시설 ‘인계’ 문제는 북한 지도부의 계획에 없다는 것을 선협적으로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만약 북미대화가 성사된다면 우리는 진지한 대화 대신 엽기적인 두 지도자의 힘겨루기를 보게 될 것이며, 대화의 결과는 아주 변변찮을 것이라는 것이 뻔히 보인다. 원칙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회답이 당연히 해야 하는 전문적인 사전준비 없이 고위급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생각에 일조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결렬된 6자회담은 북한이 제출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검증 문제를 논의하면서 심각하게 공전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북한은 미국이 작성한 엄격한 검증 절차를 단호히 거부했다. 북한이 집요하게 비밀에 부치려고 한 것을 파헤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것이 2008

년에 6자회담에서 탈퇴할 구실을 찾던 북한을 자극했다.

북미대화의 어느 시점에 미국과 북한 양측이 함정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 북한의 비핵화 여정에서 '암초'들이 그동안 더 많아지기만 했

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번역: 김연수, 한국외국어대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저: Мирное наступление Пхеньяна: приведет ли оно к ослаблению конфронт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8.3.13)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와 트럼프 요인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본 논문은 2017년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중국 방문에서 이뤄진 합의의 주요 결과들을 검토한다. 필자들의 견해로는 이 두 사건이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당대회의 주요 결과는 마오쩌둥 이래 처음으로 정치권력이 중국 국가주석에게 최대한 집중된 것이다. 행정기관 내 수직적 구조의 최종 윤곽은 2018년 봄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정상회담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우고,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대외 정책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의 미국에 주도권을 양보 하면서 계속해서 다면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키워드: 세계 경제, 중국, 미국,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

작년 여름에 발표한 중국의 행동 전망에 대한 논문에서 필자들은 두 가지 요소를 부각시켰다. 그 두 요소는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 요인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만남의 관점에서 본 미중 관계 요인이었다. 2017년 말,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이 어떻게 발

전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요인이 다시 주도적인 위치에 섰다.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은 2017년 10월 하반기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와 11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 두 사건은 서로 긴밀히 연관돼 있다.

중국인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당과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 글로벌 리더십을 획득하려는 전략적 주장을 확인했다. 또한 중국이 세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는 미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추구에 착수했다.

19차 전당대회 주요 결과는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의 손 안에 정치권력이 최고로 집중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현대사의 '3대 지도자'가 되려는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당의 공개적인 저항 없이 중국 공산당 규약(이하 '당장(黨章)')을 수정해 그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요도에 있어서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사상과 같은 반열에, 그리고 전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이념적 기여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다.

시진핑 주석은 일종의 '당 내부 정화'인 부패와의 전쟁 성과와 중국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변모시켜야 할 과제를 내세워서 리더십을 주장했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당대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당 내부의 적들에게서 벗어난 것과 유사하게 시진핑 주석은 경쟁자인 보시라이와 여타 중국의 최고 권력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반부패 캠페인을 이용했다. 시진핑 주석은 실제로는 미래에 이뤄질 자신의 역사적 업적(중국을 세계적인 리더로 변모시키는 것)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마오쩌둥과 개혁을 시작한 덩샤오핑이 중국 현대사에 기여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의미부여를 했다.

19차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은 다양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시장 개혁과 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지속하기 위해 개인 권력을 강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공

식적인 견해에 가깝다. 이러한 의견에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세계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국내에서 '강해진' 후에 세계적인 '강한 지도자' 역할도 자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시장 개혁, 특히 금융 부문의 개혁, 세계화, 세계 '자유 무역' 지대 구축 등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집착에 주목한다.

다른 사람들은 시 주석이 '아직은 그런 높은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으며,' 그의 현실은 역사적 중요도에 있어서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만큼 크지 않다고 여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시 주석의 주요 목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국 국가 주석으로서의 집권 2기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직은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지만 시 주석이 2022년에 열릴 20차 전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에 자신을 위해 새로운 직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것은 덩샤오핑이 모든 지도부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 맡은 역할과 유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黨章)에 도입된 새로운 요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당대회를 전후해 당과 사회에서 사상적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했고, 상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언론의 자유가 없어졌으며, 새로운 '개인숭배'가 생겨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전당대회 결의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과 풍자도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개인숭배'와 관련된 풍자는 당내에서가 아니라 당 외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더 많이 퍼지고 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당원이 있는 자본주의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요즘 회자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의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주요 성과는 사실상 (리커창 총리를 제외하고)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을 완전히 교체한 것이다. 시진핑 총리는 전통을 깨고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모든 상무위원들이 5년 후에는 연령 제한을 넘겨 총서기 직에 오를 수 없다.

동시에 시 주석은 예전에 지방정부에서 그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1960년대 태생의 '젊은' 인물들을 비롯한 새로운 인물들을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에 대거 포진시켰다. 그리고 장쩌민과 후진타오 계열의 인물들을 피했다.

시 주석이 현재 나이가 50대인 인물들 사이에 일종의 경쟁을 조장하고, 자신이 심판이 돼 후계자를 '육성하기로' 결정한 듯한 인상이 든다.

그와 함께 중국의 일부 분석가들은 시 주석이 그의 행동에 대한 군부의 불만을 계속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전당대회 직후 퇴역 군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중국 지도부가 이전의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약속했던 퇴역 군인들의 사회보장 혜택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전당대회 보고서에 '당이 군을 지휘'하고, 군은 '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엄격히 강조돼 있다. 중국의 모든 군인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전당대회 폐막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인사 교체 기간이 시작된다. 2018년 3월에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것을 기점으로 '시진핑 주석 하'의 새로운 통치기구가 형성된다.

전반적으로 개인 권력 체제를 형성하려는 전략적인 '시 주석의 행보'는 단기적 전망에서는 주로 통합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장기적으

로는 합법적인 민주적 사회통치 제도 구축 과정과 이미 고도로 다변화된 경제, 문화, 사상적 이해관계를 개인 권력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중국의 내적 안정성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경제에서 무엇인가가 '좋지 않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나눈 의견에 따르면 앞선 10년 정도의 수준만큼이라도 민주적 과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19차 전당대회 보고서에서 민주주의의 고수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민주주의가 '당의 지도적 역할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 권력기구, 당 기구의 중간 관료 계층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한 예측이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탄압이 '죄지은 자들'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거나 교류했던 사람들까지 휩쓸어, 징역형 또는 승진 기회 차단이나 해고로 그들을 위협한다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불만 원인은 중간 관리 계층에서 '인사 낙마' 등을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이용하는 사례가 널리 퍼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전당대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에 경제 분야에서는 전당대회를 전후한 시진핑 주석의 금융 자유화 약속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2017년 11월 중순 중국 정부는 3~5년 내에 금융서비스 시장(보험, 투자 활동, 유가증권)을 외국 자본에 개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외국 자본이 이 분야의 합작법인과 외국법인 자산 지분을 100%까지(현재의 49% 대신) 보유할 권리를 주기로 했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의 말에 따르면, 이 결정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결정되었다.

개혁안에 따라 외국 은행이 중개서비스 분야의 중국합작기업의 주식 지분을 51%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3년 후에는 이러한 지분을 제한도 폐지된다. 생명보험 부문에서도 같은 조치가 예정돼 있으나, 이 부문에서 지분을 제한은 5년 후에 폐지된다.

이와 더불어 이미 최근 3~5년 동안 중국 당국이 향후 중국의 경제 개방에 대해 논의해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도부는 개방정책을 계속하여 세계적 국가로서의 중국이 세계 금융시스템에 더 깊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중국 금융 당국에 부정적인 요소는 더 복잡한 새로운 조건하의 금융 시장 규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기 자본이 통제되지 않고 중국에 유입되는 것 등과 관련한 파괴적인 영향을 제때에 차단하지 못할 개연성도 있다.

당국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부정적인 것을 상쇄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금융 자유화를 통해 국제 자본이 중국에 유입되고,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고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금융 분야의 적극적인 조치들이 동결돼 있었다. 이제 2020년까지 금융 자유화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따라서 사실상 이것은 2016~2020년 13차 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경제 개방을 달성하고, 글로벌 경제 관리와 세계적 공익의

공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자국 목소리의 중요성을 높이고, 국제적 이익공동체를 창설할 것이다.”

개혁안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음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중국에서 ‘건축과 설계, 회계와 회계감사, 은행업, 보험, 증권 등의 부문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축소돼야’ 한다.

개혁안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외국 자본 유치와 관련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될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 중국 자본시장을 외국 기업에 더 광범위하게 개방하는 방안이 예정돼 있다(위안화 표시 유가증권 발행과 매매).

그러나 모든 중국 경제부처 수장들이 금융 자유화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13차 5개년 계획 실행 초기에 제동이 걸린 것과 19차 전당대회에서 ‘개혁에 대한 반동’이 예상되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2017년 초에 개별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1월 17일 중국 국무원이 ‘대외개방 확대 및 적극적인 외자 이용에 관한 몇몇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현행 ‘외국인 투자를 위한 산업 부문 목록’에 대한 재검토. 첨단기술 산업, 혁신산업, ‘녹색’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에너지 인프라 건설, 물류, 물 관리와 자연보호 분야에 외국 자본 투자가 허용된다.

둘째, 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엄격히 준수하고 보호하고, 인허가 취득 시에 중국 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된다. 일례로 2017년 초의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관세청이 중국 기업들이 수출할 때 합법적인 상표 사용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셋째, 외국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거나 R&D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중국의 중부와 서부 또는 동북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한다.

넷째, 외국 기업은 여타 분야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 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의 외자 투자 규제를 폐지한다. 금융 분야에서 은행 및 금융기관,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 보험기관, 보험 및 보험중개기관, 건축 설계, 신용평가 서비스 분야의 외자 투자 규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궤도교통설비 제조, 모터사이클 제조, 에탄올 연료 생산, 유지 가공 등의 분야의 규제를 폐지한다.

채광업은 석유 및 천연가스, 오일세일, 오일샌드, 세일가스 채굴에 대한 외자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각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일례로, 베이징은 TV와 라디오, 영화와 음향산업, 매니지먼트, 법률서비스, 의료 연구 등의 분야에 외국 기업 진출을 허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학문·기술 서비스, 인터넷,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교육 서비스, 금융서비스, 무역 및 관광서비스, 보건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 프로젝트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2017년 9월 중국인민은행이 비공개회의를 열어 금융 분야의 외국 자본 허가 기한을 논의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외국 금융기관이 자사의 중국 법인을 관리할 수 있

게 하고, 중국 금융기관의 외국 자본 지분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고, 외국 기업의 위안화 어음교환 서비스를 허용할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는 외국계 투자은행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합작 기업에 대해 소수지분을 가질 수 있고, 사실상 외국 기업이 소매시장에서 중국 유가증권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자사가 직접 관리하는 투자펀드에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없다.

이전에 외국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은 합작 기업의 지분을 제한 확대에 대해 중국 규제위원회와 강도 높은 대화를 이미 나누어왔다. 또한 건강 보험 분야 사업과 연금 펀드와 자연재해 보험 펀드 발행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화를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규제위원회는 외국 기업들의 상황을 이해한다. 2017년 8월 중국 정부는 우선 첫 번째로 은행, 보험, 증권거래, 전기차 제조 부문에서 점진적인 규제 완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례로 중국 규제위원회는 100% 외국 자본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소유의 투자 회사 설립을 이미 허가했다.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시진핑 주석이 전당대회 의 약속을 실행한다는) 정치적인 요인뿐 아니라, 정치 외적인 요인도 있다. 형식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을 실행하고 있다. 즉, 중국 시장에서 중국 자본과 외국 자본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일부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양보는 선의의 제스처라기보다는 중국 주식시장 상황이 실제로 좋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과 홍콩의 평가

기관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회사 3분의 1 이상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중국에서는 증권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들도 투자회사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부득이하게 인프라 건설에 재정을 투입할 뿐 아니라 지방 정부와 국영기업의 막대한 부채에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하게 됐다.

19차 전당대회 폐막 직후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중국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강한 지도자로서 그가 '신시대'에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이전의 양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호전 국면으로 나아갈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국민방문 플러스(+)'라고 강조하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정상회담을 배경으로 중국의 분석가들은 오늘날 중국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가 '러시아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사적인 대화에서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는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드러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주식시장 자유화 약속을 실현하는 데에 이미 착수했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미중 양국은 경제 협정을 체결하고 거의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다. 중국은 상호무역에서 미국의 적자 폭을 줄일 것을 약속했다. 중국이 미국 자동차,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석유와 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것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화답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더 광범위하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한

것은 알래스카 유전에서 채굴되는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LNG)를 중국으로 수송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석유화학공사(China Petrochemical Corp)는 알래스카 유전의 LNG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430억 달러의 계약에 서명했다. 중국투자공사(China Investment Corp)와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가 미국의 셰니에르 에너지(Cheniere Energy)와 LNG 장기 구매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에너지투자공사(China Energy Investment Corp)가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와 에너지, 화학 분야 프로젝트에 8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2017~2018년에 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콩 1,200만 톤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이 중국 기업 세 곳과 총 35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었는데, 길상항공(Juneyao Airlines)과 14억 달러, 중국공상은행(ICBC Leasing)과 11억 달러, 중국 다탕그룹(China Datang Group)과 10억 달러이다. 중국항공용품유한회사(China Aviation Supplies Holding Company)가 총 370억 달러 상당의 보잉(Boeing)사의 비행기 300대를 구매할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투자공사(China Investment Corp)와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합작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펀

드의 총액은 대략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중국 실크로드 기금(China's Silk Road Fund)과 제너럴 일렉트릭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중국의 샤오미(Xiaomi), 오포(OPPO), 비보(Vivo)가 미국의 퀄컴과 총 120억 달러의 3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미중 정상회담의 세 번째 주요 주제는 북한 문제였다. 이 문제에서 양측은 상당히 약한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과 '더 긴밀히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중국은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미-중 양측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중국과 미국에서 서로 다르게 조명됐다. 중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전적으로 우세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세계적인 리더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이러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한 것으로, 주로 민주당 소속의 국내 정적들로부터 나왔다.

이 두 사건 외에도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 뒤이은 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시진핑 주석은 APEC 정상회의를 다방면으로 이용했다.

첫째, 시진핑 주석은 '정상' 외교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했다.

둘째,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각적인 중국의 글로벌 외교를 보여줬다.

셋째,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계기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계획을 확고히 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이 추진한 TPP-11(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중국 경제 외교의 유연성을 보여주려 했다.

넷째, 중국은 일본에 상호 국민방문을 제안하며 일본 및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주변외교'(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두었다. 이전에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합의한 남중국해 행동규약의 실질적인 시행을 촉구하며, '일대일로'의 거대전략 프레임에서 새로운 투자를 약속했다.

다각적인 중국 외교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약간 빛이 바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베이징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윤곽을 그렸다. 이 새로운 구상은 인도를 미국과의 협력에 끌어들이는 데에 의의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APEC 정상회의에 뒤이어 마닐라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정책에서 이른바 QUOD, 즉 '중국을 둘러싼 민주주의 4개국'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

한 경우, 전통적으로 중국의 공식적인 이의를 야기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19차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미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같은 기조로 '이견이 있더라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그늘을 드리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중국공산당 19차 전당대회의 결과가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어떤 위협이나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게다가 중국의 금융 자유화, 아태자유무역지대 건설, 에너지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고도의 경제 발전 지속 등의 계획은 재편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금융을 비롯한 새로운 부문들을 개척할 장기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와 동시에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추구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방법은 러시아에 전략적인 위기를 야기한다. 러시아는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 그리고 중국에게 있어서 미국보다는 덜 중요한 위치에 계속 놓이게 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세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다양한 정치·경제 무대에서 자국의 주요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러시아의 세계 정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중국이 가스 공급원을 알래스카 유전으로 다각화하는 것은 러시아의 수출업자들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그들의 이익에 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아마 미국 LNG는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중국의 동부, 중부, 남동지역으로 갈 것이고, 중국 동북지역 산업지대의 '틈새시장'이 러시아에 남겨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중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러시아 수출업자들의 입지를 전략적으로 약화시키고, 러시아 수출업자들이 새로운 중국 시장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중국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러시아는 단기적, 중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러중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첫째, 양국 관계와 세계 발전에 대한 전략적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국의 주요 정책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결부시킬 수 있는 주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일본, 베트남, 한국,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균형을 맞추는 주변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는 것이다.

셋째, 러미 관계 조정 노선을 견지해 대미정책에서 중국 요인으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미국 요인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번역 : 김연수, 한국외국어대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바실리 미헤예프(V.V. Mikhee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세르게이 루코닌(S.A. Lukonin) 경제학 박사, IMEMO 중국 경제정치 부장

· 원제: XIX съезд КПК и фактор Трампа в политике Китая

· 출처: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Vol. 62, No. 3 (2018), pp. 71-77.

중국의 신(新)시대 : 부(富)에서 강(強)으로

올가 보로흐,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본 논문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에서 소개된 새로운 구상들이 다뤄진다. 중국은 '신시대' 진입에 대해 발표하고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면서 중국 경제의 고품질 성장으로의 이동이라는 맥락에서 양적인 성장 지표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게 됐다. 전당대회에서는 2035년과 2050년까지의 장기 계획이 설정됐다. 시진핑이 지난 5년간 제안한 수많은 아이디어와 슬로건은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당장(黨章)에 포함됐다. 당 권력의 집중화 및 신격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 지도부의 후계자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고, 이는 중국 정치의 불확실성 요인을 만들어줬다.

키워드: 중국공산당, 시진핑, 경제 개혁, 정치 시스템, 이데올로기

2017년 9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는 중국 발전에 나타난 큰 변화들을 반영했다. 시진핑은 집권 5년간 국가 거버넌스와 경제 개혁, 중국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 당 내부적 문제 등과 관련한 새로운 구상과 접근법을 여럿 제안했다. 이와 같이 심도 있는 대규모 쇄신은 1990년대 장쩌민 집권

시절에도, 2000년대 후진타오 집권 시절에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는 여러 변화를 체계화하고, 이러한 변화에 공식 이데올로기의 구성 요소라는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가 발표되고,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변화했다는 점은 중국 지도부가 향후 발전 전략을

재고하고, 이 전략을 새로운 현실에 적용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새로운 모순

시진핑은 2017년 7월 26-27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간부모임에서 연설을 통해 19차 전당대회 보고서의 주요 의제를 소개했다. 그는 '전반성, 전략성, 전망성을 가진 행동강령'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시진핑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중국 발전에 있어서 '단계별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 발생한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19차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의 특성이 소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했다.

시진핑은 2012년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대 전당대회 이후에 역사적 변화가 생겨났고, "중국의 발전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19차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단계의 특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산당 지방위원회 간부모임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중국 민족은 '우리 발로 일어서고,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역사적 도약'을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치에서 '일어서는'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마오쩌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경제력 획득은 덩샤오핑의 개혁과 관련이 있다. '중국 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선포되면서 이를 시진핑 지도부와 결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마련됐다.

간부모임의 연설문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많은 정치 논평이 언론에 공개된 그의 발언에 의거

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사회주의의 현 발전 단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을 포착하며, 중국 사회주의의 새로운 발전 단계의 의미와 이와 관련한 새로운 과제들을 인식하자고 촉구했다.

제19차 전당대회 보고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접어들었고, 이는 우리 발전의 새로운 역사 방향이다'고 밝힌다. 중국의 선전가들은 신시대 진입이라는 결론이 제19차 전당대회에서야 비로소 내려졌지만, 신시대의 역사적 출발점을 19차 전당대회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신시대 진입 과정은 제18차 전당대회부터 시작해 시진핑 집권 5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시대의 시작점은 2017년이 아닌, 2012년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19차 전당대회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 간 모순'이라는 중국 사회의 새로운 주요 모순이 당장(黨章)에 채택됐다. 중국의 당이 테올로기는 주요 모순의 정의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새로운 모순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겨난 이래 네 번째 주요 모순이 됐다.

마오쩌둥 통치 시절인 1956년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8차 전당대회에서는 선진 공업국에 대한 요구와 낙후한 농업 국가 현실 간의 모순과, 고속 경제 및 문화 발전에 대한 인민의 수요와 이러한 수요 충족에 대한 기존 경제 및 문화의 무능력 간의 모순이 지적됐다. 오늘날 중국 내 학자들은 이 모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국가 발전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문제가 반영돼 있다고 본다. 그러나 1950년대에서 60년대로 접어들 무렵, 마오쩌둥은 중국 사

회의 주요 모순이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간의 계급투쟁이라고 언급한다. 오늘날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이 모순은 1970년대 말까지 유효했다.

주요 모순이 경제 문제로 돌아온 것은 1981년에 열린 중국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였다. ‘전반적인 사회주의 개혁이 완수된 후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주요 모순은 날로 증대하는 인민의 물질·문화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력간의 모순이다.’ 인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경제 건설에 노력을 집중하는 구호는 덩샤오핑 개혁의 기초가 됐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기초가 노후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초가 지금의 형태로 채택된 지 36년이 흘렀고, 초기 형태로 채택된 1956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0년도 더 지났다. 중국 사회에서는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형태의 기초는 현 생산 발전 단계도, 사람들의 수요도 표현하지 못한다. 현재 중국은 개혁 정책이 실시된 초창기처럼 생산이 더 이상 ‘낙후’되지 않았다.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톈진) 경제는 선진국과 비견될 만하고, 중국은 세계 2대 경제 대국이 됐으며, 공산품 및 농산물 중 220개 품목에서 생산 규모가 전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선진 과학기술 기업이 여럿 생겨났다. 이와 유사하게 개혁 기간 동안 크게 부유해진 국민들의 수요는 물질 부문과 문화에 귀결되지 않는다. 동등함과 평등함, 법 준수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겨났고, 대기와 토양의 질, 수질과 식료품 안전에 대한 환경 요구가 거세졌다.

생산 규모를 더욱 끌어올리는 것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모순 속에서는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

들에 대한 언급이 일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는 생산 낙후가 아니라 발전 불균형, 불충분에 대한 표현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 다양한 사회계층 간, 그리고 개별 생산 부문 간 심각한 발전 격차를 극복하는 데 노력이 집중될 수 있다.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모순과 중국의 발전 단계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 대한 확인이 결합된 것은 중국의 이론가들에게 있어 도전이 됐다. 이들은 ‘변화’와 ‘불변’ 간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변증법적 방법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리쥔루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부총장은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압축된 형태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시진핑이 이해하자고 촉구해 온 새로운 ‘발전의 단계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모순의 변화는 ‘당과 국가의 정치 노선 및 장기 전략을 정의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는 기본 기초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기본 기초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초기 사회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다. 중국이 달성한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GDP는 지난 5년간 54조 위안에서 80조 위안으로 증가했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0%가 넘는다), 1인당 GDP는 여전히 전 세계 평균치에 머무르며, 빈곤선 이하 인구 수가 4,300만 명이 넘는다.

이전의 주요 모순은 각각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제안한 것이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재임 시절에는 주요 모순이 새롭게 명문화된 적이 없었다. 전당대회에서 중국 사회의 새로운 주요 모순이 제안되면서 당 이론가로서의 시진

핑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반열에 올랐다. 또한 여기에는 지난 5년간 나온 구상 및 슬로건이 폭넓게 흡수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 사상'이 공식화 된 것도 한 몫했다.

전당대회 보고서에는 중국의 향후 발전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시진핑은 2020년까지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0년부터 2035년까지는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가 이행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2035년부터 2050년까지 중국공산당은 현대적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은 또다시 덩샤오핑의 반열에 올랐다. 1980년대 '개혁·개방의 총설계자' 덩샤오핑은 3단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1981~1990년에는 GDP를 두 배 끌어올리고, 인민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목표였다. 1991년부터 20세기 말까지로 예정된 두 번째 단계는 GDP를 또다시 두 배 끌어올리고, 인민의 삶을 '샤오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세 번째 단계는 21세기 중반까지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의 삶을 '따통(大同, 풍요로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기본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후 덩샤오핑의 계획은 구체화됐다. 1997년에 열린 제15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세 번째 단계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됐다. 바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GDP를 2000년도 대비 두 배 증가시키고, 비교적 완전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후 10년간,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까지 이 시스템은 보다 더 완벽하게, 경제는 더 성장시키자는

것이였다. 제18차 전당대회에서는 공산당 창립 100주년에 맞춰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됐고, 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0년 중국 총GDP와 1인당 평균 소득이 2010년 대비 두 배 증가해야 한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 시절에 생겨난 이 모든 구체적 계획은 덩샤오핑의 패러다임을 벗어 나지 않았다. 시진핑은 제19차 전당대회에서 2 단계로 이루어진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다. 덩샤오핑의 계획 보다 15년 더 빠른 2035년에 중국의 현대화를 이룩하자는 것이였다. 그리고 21세기 중반 이전, 공산당 창립 100주년에 맞춰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였다. 이러한 계획은 제18차 전당대회에서 이미 제안됐으나, 시진핑은 이를 약간 수정했다.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가리키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마지막 부분에 '국가' 대신 '강국'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며, 이는 한자 그대로도 '강한 국가(強國)'로 쓰였으며, 이는 중국이 부유함의 시대에서 강력함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경제 정책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시기는 2008~2009년 위기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부정적 여파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 선포는 경제 정책을 성장세 둔화라는 여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에 부합시키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였다.

제19차 전당대회 보고서의 개요에는 지난 5년 동안 중고속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가 '신창타이'로 접어들었다고 언급된다. 그러나 보고서 본문에는 '신창타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존에 사용되던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이동이라는 용어 대신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의 이동'을 실현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경제 성장에 대한 요구가 변화됐음을 강조하며 경기 둔화에 대한 공공연한 지적을 피할 수 있다. 경제 부문의 주요 지향점은 공급 부문의 구조 개혁을 지속하는 것과 중국의 '혁신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왕타오 USB 증권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전당대회 보고서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지표가 후순위로 물러나는 등 질적인 경제 성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시진핑은 공급 개혁, 국영기업 개혁, 민간 경제 발전, 시장 요소의 역할 제고, 개방 확대, 사회 보장 시스템 건설 노선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앞서 발표된 GDP 2배 성장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2018~2020년 중국은 연간 GDP 성장률을 6.3%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장기적 지향점(2035년까지 현대화, 2050년까지 현대 강국 건설)은 GDP 성장과는 별개로 전당대회에서 소개됐다.

이는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부채를 통한 경기 부양을 할 필요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줌으로써, 경제 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행동의 자유를 주는 주된 결정이다. 과거 중국 정부는 양적 성장 지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시사항이 아니며, 지방 관료들

의 활동 평가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계속해서 고려돼 왔다. 국가 차원에서 GDP 증대를 목표로 세우는 것을 포기한 이후에나 이러한 현실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눈에 띄고, 관심을 받을만한 변화는 금융 부문에서 생겨났다. 보고서는 가장 먼저 금융 개혁을 강화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부문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자고 촉구했다. 과거 당 문건들에 포함된 '금융 혁신'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은 금융 부문에 대해 당국이 한층 더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 인민은행의 권고에 따라 보고서에는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결합하는 '쌍지주 컨트롤 시스템'의 건전화에 대한 요구가 포함됐다. '거시건전성 정책' 개념은 중국공산당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이는 금융 부문에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걸목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전당대회 보고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널리 알려진 학습 자료에 따르면 거시경제 운용의 '쌍지주 시스템'의 건전화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는 사실은 중국이 세계 금융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고, 중국의 국가적 특색과 관련한 금융 정책의 특성이 이해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건전화 이니셔티브는 통화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시스템적 리스크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보호이다. 과거에 금융 통제에 있어 주요 위치를 점한 것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유지를 지향하는 통화 정책이었다. 금융 시스템과 직

결된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나친 레버리지 사용과 경기순행적 행위를 억제하며,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호한다. '쌍지주 시스템'의 등장은 거시경제 컨트롤 메커니즘의 개선을 의미한다.

금융 리스크 위협에 대해 당국이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신호가 된 것은 2017년 7월에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 이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사설 첫 줄에 '블랙 스완'과 '회색 코뿔소' 예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이는 나심 탈렙의 '블랙 스완' 이론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회색 코뿔소'는 새롭게 언급된 것이었는데,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부커가 제안한 개념으로, '회색 코뿔소'에 대한 그녀의 저서는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회색 코뿔소'의 위험성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생각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리스크를 잊기 시작했다라는 우려와 관련이 있다. 황이핑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부소장은 '블랙 스완'으로부터 보호받기는 어려우나,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는 복잡하지 않은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시장에서는 경기 상승세와 하락세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늘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며,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제19차 전당

대회 기간 동안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발표한 '민스키 모멘트', 즉 오랜 호황기 이후 부채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었다. 그는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기 친화적 요인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시장의 지나친 낙관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모순의 축적으로 이어지며 어느 순간 '민스키 모멘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샤오촨 총재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폭락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해결적으로 고부채율 감축을 제시했고, 부채 자본화와 '좀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실시되는 정책이 부분적, 혹은 완전한 '민스키 모멘트' 예방과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의 발생을 막는 마지노선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회색 코뿔소'와 '민스키 모멘트'가 공식 경제 용어로 등장한 것은 당국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제19차 전당대회 보고서 중 경제 조항이 시장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국영기업 개혁 정책에서는 국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의 강화를 촉구했던 기존의 조항이 사라졌다. 국유자산의 가격을 높이고 국가 자본이 '강력하고 건전한 대규모 자본'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됐고, 또한 국부유출을 예방해야 한다고도 지적됐다. 이 모든 것은 국영기업이 혼합소유 자산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독점적 국가 경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만한 근거를 주었다.

중국학자들은 전당대회가 비국영기업의 재

산권 보호 및 생산 요소의 시장분배 강화 노선을 취했다고 지적한다. 예전에는 여기에 큰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중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1999년, 국영기업 개혁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국영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들 각각을 개선할 필요는 없고, 전반적인 국가경제 지표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밝혔다. 이제 정부는 부실한 ‘좀비’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요구해야 하고, ‘이는 중요한 진일보이다.’

민간 경제 부문에 득이 되도록 향후 5년간 ‘네거티브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단일 시장 구축과 공정한 경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 시스템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됐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이는 중국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중국 시장의 해외 자본 유치에 기여할 것이다. 비국영 부문에 있어서 못지않게 긍정적인 신호는 전당대회 보고서에 ‘기업가 정신의 고취 및 보호’가 언급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현대적 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과 능력, 혁신 역량을 갖춰야 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마스터 정신’ 고양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점차적으로 실현하면 지난 몇 년간 심화되어온 국가 경제의 입지 강화와 어쩔 수 없는 ‘민간 비즈니스의 후퇴’라는 경향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야오위안 AXA 투자관리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도부의 접근법이 내적 모순을 포함하는데,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시장 강화를 추구하면서도 사회·경제 발전에서 당의 역할을 여전히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약

속된 국영기업 개혁은 투자자들에게 있어 대규모 민영화의 전조가 아니다. 전략 부문에서의 국영기업은 중국공산당에 부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국가 차원의 경제 통제 과정에서의 중재자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영 기업에 기대지 않았더라면 중국 정부는 4조 위안(6천억 달러)을 경제에 신속하게 쏟아 부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4조 위안을 투입해 세계 금융 위기의 부정적 여파로부터 벗어났다. 국영 기업 통제를 포기하면 당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므로, 이 부문에서는 한동안 절제된 진척만 가능할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다고 말한다. 향후 몇 년 동안 ‘인터넷,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과 실물 경제와의 연결을 고도화’하자는 과제가 세워졌다. 인터넷 경제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며, 중국의 노후한 전통 경제를 개혁해 줄 원동력이자, 고품질 신규 일자리 창출의 주요 원천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디지털 경제가 중국이 글로벌 리더들을 ‘커브에서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주요 평형추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진핑은 전당대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련의 경제 문제를 다뤘다. 약 10년 후에는 중국 농민들이 개혁 초기에 체결했던 토지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전당대회에서는 이 계약들이 앞으로 30년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농촌과 농업 문제가 제18차 전당대회에서는 도시 및 농촌 통합 전략의 맥락에서 기술됐는데, 이번에는 개별 주제 단락에서 별도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제 농촌 및 농업 문제는 더 큰 지위를 얻게 됐고,

도시화와는 별개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사회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집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시진핑의 발언이었다. 이 발언에 더해 주택 판매 및 임대료를 아우르는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자하는 촉구가 수반됐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가 금융 안전성 유지에 위협한 투기 ‘버블’의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전국적인 부동산 세 도입이 통제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 구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는 질서가 확립된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권력 계승

이번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중국공산당 당장 개정안은 중국 정치에서 발생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행동 지침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이제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과 ‘과학발전관’의 뒤를 이었다.

이 모든 개념이 생겨난 배경은 독특하다. ‘마오쩌둥 사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인 1945년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7차 공산장 전당대회에서 당장에 포함됐다. 이후 1956년에 열린 제8차 전당대회에서는 소련의 스탈린 개인 숭배에 대한 비판의 영향력 하에서 마오쩌둥 사상은 당장에서 제외됐고, 1969년에 ‘문화대혁명’을 배경으로 다시 당장에 복귀됐다. 덩샤

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이론’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92년으로, ‘개혁개방의 총설계자’ 덩샤오핑이 이미 정권에서 완전히 물러난 이후였다. ‘덩샤오핑 이론’은 그의 사망 이후인 1997년에 명문화됐다.

‘3대 대표 중요 사상’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이었고, 2002년에 장쩌민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에서 물러나면서 공식 지위를 획득했다. 덩샤오핑 이론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선진 생산력의 발전 요구를 대표하고, 선진문화가 나아갈 방향과, 중국의 모든 국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요 사상’에는 ‘선진 생산력’의 구축자인 민간 부문의 진보적 역할 인정이라는 화두가 숨겨져 있다.

후진타오가 ‘과학발전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정권을 잡은 후 1년이 지나서였다. 그는 사회·경제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발전은 전면적이고, 조율되며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생각은 후진타오 집권 중반인 2007년에 당장에 포함됐다.

시진핑은 후진타오가 걸어온 길을 형식적으로 반복했는데, 시진핑 사상 또한 그가 집권하고 5년이 지난 후에야 당장에 포함됐기 때문이었다. 차이점이라면 ‘시진핑 사상’은 2012년 이후에 나온 수많은 이니셔티브와 슬로건을 일반화한 것이라는 데 있었다. 시진핑 사상은 보고서에 ‘8가지 규정정신’과 ‘14개 조목’으로 구성돼 있고, 이는 그 복잡성과 내용적 어려움에 따라 ‘3개 대표 중요 사상’과 ‘과학발전관’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지도자의 이름을 딴 사상에 대한 언급은 ‘시진핑 사상’을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과 나란히 서게 해 준다. 당장에 따르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에 대한 계승과 발전이고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며 당과 인민의 실천경험과 집단 지혜의 결정체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전당,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지침으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공산당의 당정 개정안에는 발전 방법과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 사회 구조, 중국 문화 등에 대한 자신감을 굳건히 하자는 시진핑의 호소가 포함됐다. 시진핑이 집권하자마자 나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라는 구호가 공식 지위를 얻게 됐다. 중국 사회의 새로운 주요 모순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시진핑이 제안한 ‘5대 발전 이념(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향)’과 ‘4개 전면론(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구축, 개혁 심화, 의법치국, 종업치당)’이 명문화됐다. ‘양질의 고속’ 경제 발전에 대한 기존의 요구가 ‘보다 더 고품질의,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한 요구로 변화된 것은 경제 성장을 더 이상 지향하지 않겠다는 것을 반영한다. ‘시진핑 사상’의 독자적 측면은 이데올로기 작업 강화, 안보 및 주권 보호 문제, 환경 보호, 강력한 군대 건설과 관련한 당장 수정 및 추가에서 잘 나타난다.

당장에서 중국공산당의 대외정책이 기술된 단락에는 ‘공동 논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 원칙을 따르는 ‘올바른 정의관’과 ‘인류 운명공동

체’ 구축에 대한 전념과 국제 사회에 가장 잘 알려진 시진핑의 이니셔티브 ‘일대일로’ 건설 추진에 대한 언급까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당내 규율 강화, 부정부패 척결, 당과 인민들 간의 관계 강화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 추가됐다. 중국공산당 당원들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권위와 통일된 리더십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당은 권력을 포기하거나 다른 세력과 이룰 나눌 생각이 없다. ‘중국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당, 정부, 군대, 민간조직, 학교, 동서남북 전역과 중앙의 모든 곳에서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고 개정된 당장에서 언급된다.

전당대회의 결과는 시진핑의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분명하게 강화됐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새 상무위원단은 지난 수십 년간 작동해온 비공식 규정에 결함이 생겼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후계자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았고, 그에 대한 답은 2022년 하반기에 열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를 앞두고서야 나올 수 있다.

지난번에는 권력 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이 사전에 진행됐다. 제17차 전당대회 이후 2007년 가을에 열린 중앙위원회제1차 전체회의에서 당시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였던 시진핑과 랴오닝성 당위원회 서기였던 리커창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됐다. 2012년에 열린 제18차 전당대회 이후 시진핑과 리커창은 상무위원직을 연임했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총서기 및 중국 국가 주석직을 맡게 됐고, 리커창은 중국 국무원 총리가 됐다.

이 시나리오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제19차 전당대회 이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단에 1960년대 생인 젊은 정치인 두 명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2인방이 포함되어야 했다. 지금 이들은 약 55세여야 한다. 그럴 경우 이들은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라는 비공식 연령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권력을 손에 쥌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상무위원단에 이러한 유망한 정치인은 없고, 새롭게 선출된 위원들은 모두 60세가 넘는다. 이들 중 일부는 제20차 전당대회 이후에도 상무위원직에 남을 수 있을 것이나, 제21차 전당대회가 열리는 2027년 이후에는 모두 70세가 넘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자리를 떠나는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위해 후계자들을 지명해왔다. 이는 후계자들이 개인적 역량과 업무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수습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했다. 2012년 후진타오는 2022년에 시진핑과 리커창을 이을 '후계자를 위한 후계자들' 2인방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에 천거했다. 바로 후춘화와 쑨정차이었다. 그러나 충칭시 서기였던 쑨정차이는 2017년 7월에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 해 9월 말 당에서 제명됐다고 발표했다.

후계자들 2인방은 예기치 못하게 무너졌다. 새롭게 중앙정치국원으로 선출됐고, 이미 충칭시 서기직도 맡기던 천민얼이 쑨정차이를 대체할 수 있다. 2022년 후춘화와 천민얼은 상무위원직을 맡지 않고도 최고 권력으로 조속히 올

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 유리한 간접 논거는 시진핑이 내세웠다고 여겨지는 천민얼이 전국을 돌며 제19차 전당대회의 결과를 설명해야했던 선전단에 포함된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천민얼은 고위인사 36명으로 이루어진 선전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권위가 높아질 수 있고, 더 유명하고 대중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권력 이양 준비 시나리오에 위배되면서 중국 정치에 불확실성 요소가 생겨났고, 2022년 이후 시진핑의 3선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했다. 이 경우 시진핑은 2027년이 되어서야 후계자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19차 전당대회의 결과는 주요 비공식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기존의 정당 대표들과 관련한 다양한 '계파' 출신의 인물들로 보완하는 전통을 유지했다. 새로운 중국 상무위원단에서 리커창 총리와 왕양 중국 인민정치 협상회의 주석 후보는 후진타오가 이끄는 '공산주의 청년단'에 속한다. 왕후닝 당 중앙서기처 신임 서기와 유력한 부총리 후보인 한정은 장쩌민이 수장인 '상하이방' 소속이다. 시진핑이 직접 천거한 사람으로는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신임 서기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후보 리잔수가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내부의 균형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시진핑이 비공식 연령 제한을 따른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69세인 왕치산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시절 부정부패 척결에서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럼으로써 시진핑의 정치 이미지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래도 그는 어쨌거나 연령 상한선에 도

달해 서기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부정부패와의 싸움은 지속될 것이다. 2018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기구가 설립될 것이고, 이 기구는 공식 수사권을 가지며 당 외부의 부패 인사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전당대회에서는 당 중앙 전면적 의법치국 영도소조를 설립하자고 언급했는데, 이 영도소조는 입법, 엄격한 법 적용 및 공정한 사법 시스템 보장 문제를 맡게 될 것이다.

체제 전망

제19차 전당대회가 시작하기 1년 전인 2016년 10월에 열린 당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발표된 공보(코뮤니케)에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라는 표현이 두 차례 등장했다. 이와 같은 타이틀은 덩샤오핑이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으로서, 그는 1989년에 과거에는 당의 '핵심'이 마오쩌둥이었다면, 이제는 덩샤오핑 자신이고, 다음 '핵심'은 그의 후계자인 장쩌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이론은 비극적인 텐안먼 사태가 벌어진 후 당내 여러 분파를 통합하려는 상황 속에서 생겨났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온건 자유화를 배경으로 후진타오는 스스로에게 '핵심' 지위를 부여하지 못한 채 통치를 마쳤다. 핵심 이론을 꺼내든 것은 당 권력의 신격화와 집중화 전통으로의 회귀를 가리킨다.

이러한 경향은 뒤이어 2017년 10월 27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새롭게 나타났다. 이 회의에서는 단일 중앙 지도부의 강화 문제가 논의됐다. 공개된 회의 자료에 따르

면 '시진핑 총서기는 전당, 전국 인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훌륭한 영도자이다.'

중국공산당의 통치 역사상 '영도자'는 단 두 명 있었다. 바로 '위대한 영도자' 마오쩌둥과, 그의 후계자이자 권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1980년대에 중국공산당 서기직에서 물러난 '현명한 영도자' 화궈핑이다. '영도자' 타이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정치 용어로 모습을 드러냈다. 2017년 8월에 발간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책에서 저명한 사회과학자 후안강은 당은 '영도자와 '핵심'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굴기와 '대(大)당 통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영도자와 불가분의 관계로, 역사적으로 그러한 인물 중에는 워싱턴, 링컨, 비스마르크, 레닌, 마오쩌둥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기 때 '핵심'인 지도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예로 루스벨트와 스탈린이 있다. 후안강에 따르면 서방 세계에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이들은 직업 정치인으로 여겨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이들은 정치가라고 불린다. 중국 정치인들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수 세대를 미리 내다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마오쩌둥은 어떻게 50~60년 만에 미국을 추월할지 고민했고, 덩샤오핑은 21세기 중반까지 활용될 '3단계'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 실현 또한 앞으로 수 세대를 내다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인 지도자는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끌고 올 것이다.

시진핑은 '훌륭한 영도자'로 불리게 되면서 마오쩌둥을 제외한 모든 전임자들보다 위상이 더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결정이 당 엘리트들의 컨센서스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2017년 10월 27일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집단지도체제’나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가 아닌, ‘단일한 중앙’ 지도부에 대한 언급이 나온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중앙위원회의 ‘핵심’인 시진핑이 ‘집단지도체제’에서 더 큰 무게감을 가졌던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의견을 거부할 수 있는 최고 존엄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제 상무위원들은 ‘단일한 중앙’ 지도부와 중앙위원회에서의 시진핑의 ‘핵심’ 지위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제19차 전당대회가 종료된 직후인 2017년 10월 25일에 중국 인민대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연구 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공개된 초빙 연구자들의 구성으로 미뤄 보았을 때, 이 센터는 전진기지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마르크시즘과 중국 사회주의 이론을 연구하는 가장 유명한 전문가들이다. 센터는 마르크시즘의 중국화 경험을 맥락으로, 마르크시즘의 이론적 관점에서 시진핑 사상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설정된 과제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 사상의 정수를 갖추고,’ ‘신시대’와 ‘새로운 모순’이라는 중요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며,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생겨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후 연구 결과는 교육 과정에 도입될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교과서를 보급하는데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은 지역 ‘시진핑 사상’ 연구 센터로, 지역 연구 센터는 2017년 11월 중순에 랴오닝대학, 허베이대학, 윈난대학, 산둥대학, 칭화대학, 하얼빈대학, 텐진사범대와 후난사범대 등 일련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문을 열었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의 주요 메시지

는 ‘초심을 잃지 말고 사명을 기억하자’는 것이었다. 전당대회에서는 당의 현 정책과, 당이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에서 외쳤던 ‘중화 민족을 위한 행복, 중화 민족을 위한 부흥’이라는 이상 간의 관계가 강조됐다. 시진핑이 이끄는 새로운 상무위원단의 첫 번째 시찰은 역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2017년 10월 31일에 이들은 1921년 7월에 최초로 열린 중국공산당 제1차 전당대회 유적지를 방문하기 위해 상하이에 갔다. 그 곳에서 이들은 붉은 당기 앞에 서서 중국공산당 입당선서를 했다. 상무위원단은 이후 상하이 인근의 난후 호수에 있는 홍선을 보기 위해 저장성으로 향했다. 제1차 공산당 전당대회 대표들은 경찰의 감시가 심화되자 상하이를 버리고 난후 호수에 있는 홍선에서 회의를 계속했다고 한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현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부정적 생각도 든다. 취다웨이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시진핑 치하에서 중국은 정적이 제거되고 새로운 지도 이데올로기가 심어지는 ‘제3의 시대’로 진입했는데, 이러한 작업을 가장 먼저 실시한 이는 마오쩌둥이고, 두 번째로 실시한 사람은 덩샤오핑이라고 밝혔다. 취다웨이 교수는 지도 이데올로기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리더를 갖춘 고도로 중앙화된 정치 체제는 중국을 불행에 빠트릴 수 있는데, 이러한 체제가 지도부 내 대안 사상을 무시하고, 과도한 군사적 압박 리스크를 낳으며, 공개 연설을 억누르고 이같이 강력해지는 힘을 두려워하는 국가들 간의 국제 연대 구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명한 현대 중국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샴보(조지 워싱턴대)는 2009년부터 중국이 ‘강성 권

위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 단계로 나아가는 데 방해받을 수 있다. 삼보 교수는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정체할 것이며,'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고, 사회 문제는 악화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집권당은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 전체주의'로의 회귀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데, 왜냐하면 삼보 교수는 장쩌민 통치 말기와 후진타오 집권 중반까지 존재했던 '부드러운 권위주의'가 중국에 있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권위주의' 시절에는 언론과 반체제 인사, 공론에 대한 태도가 보다 자유로웠다. 최선의 해결책은 '부드러운 권위주의'가 싱가포르식 '절반의 민주주의'로 점차 변모해 나가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의 국가 발전의 길이 옳으며,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다. 전당대회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경험은 개발도상국에 '현대화로 향하는 길'을 놓아주었고, 고속 성장을 원하면서 자주권을 지키고 싶어 하는 국가와 민족들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선택권'을 제시했다고 언급됐다. 이는 '모델'이나 '예시'가 아니라, 서양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을 의미하는 '새로운 선택권'이다. 전당대회 단상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전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와 '계획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국이 '매일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끊임없이 인류의 문제에 더욱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세바스찬 헤일만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책임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중국 체제의 진화론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공

산당의 뻣뻣해진 권력상이 이미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중국 지도부가 경제 및 사회 통치에 대한 접근법을 변화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10년 전에는 인터넷 혁명이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줄 것이라고 다들 여겼는데, 현재 '빅데이터' 혁명은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중국공산당은 이 기회를 포착했고, 이제 중앙화된 '위로부터의 계획'은 중국에게 기술 혁신과 경제 지표, 정치 안정성 보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아닌, 소중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헤일만은 시진핑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레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고 보고, 중국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치적으로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는 생산적이며, 사회적으로는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 체제는 글로벌적 의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은 다양한 사회 발전 모델 간에 새로운 경쟁을 피하려고 하면서, 전당대회에서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의 목표를 천명했다. 이 정책의 기저에는 발전한 서양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계화 모델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다.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지탱해준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명문화된 결정들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있어 중국 내부 문제에만 관련된 머나먼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중국과 전 세계와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제19차 전당대회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중국 경제의 발전이 지속될 것이며, 중국 요인 덕분에 세계 경제가 큰 안정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근거를 주었다.

2035년, 2050년까지의 중국 발전 계획이 발표된 것은 중국 체제가 장기적 전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세계무대에서 중국이 보이게 될 향후 행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번역: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올가 보로흐(O.N. Borokh)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경제학 박사
- 알렉산드르 로마노프(A.V. Roman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원제: Новая Эпоха Китая: от Обогащения к Усилению
- 출처: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Vol. 62, No. 3 (2018), pp. 59-70.

중국 : 헌법 개정의 외적 배경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2018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명시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시진핑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권력을 독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바로 이 점이 2018년 1분기의 핵심사항이다.

2기 10년으로 규정돼 있던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이 폐지됐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2017년 말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에서 공산당 당장(黨章)에 삽입됐고, 이후 헌법에도 명문화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신시대'이다. 시진핑은 권력 임기 제한을 철폐한 것이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끈 선구자 덩샤오핑의 유훈을 위반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통해 '중국 특색을 띤 사회주의'라는 덩샤오핑 사상을 여전히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진핑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보듯이 '신시대'를 말하고 있다. 과거 덩샤오핑이

직면했던 경제부흥이라는 과제는 이제 해결됐고, 오늘날은 좀 더 확대된 과제, 다시 말해서 중국을 세계지도자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 따르면, 그 과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핵심지도자가 장기간 권력을 장악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

두 번째 유의해야 할 헌법상 중요 변화는 '당의 지도적 역할론'을 헌법 서문에서, 법률적 의미에서 서문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총장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시진핑은 상징적 차원에서, 존재하고는 있었으나 마오쩌둥 이후 최근 이십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당 중앙'라는 '칭호'에 추가로, 공식적으로 민족의 '영도자'(비록 마오쩌둥에게 붙여졌던 '위대한'이란 수식어가 없기는 하지만)로 명명됐다.

인사 차원에서, 시진핑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예를 들어, 시진핑 집권 1기 부정부패 척결을 이끌었던 왕치산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상

무위원회 상무위원을 연령제한 때문에 그만두어야 했지만 전인대에서 국가부주석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게끔 젊은 간부들을 고위직에 등용하면서 전진 배치시켰다. 게다가 시진핑은 새롭게 부상한 간부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당내 투쟁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로마노프 교수가 예측했듯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상무위원들을 기존 당내 분파들 간의 균형(각 분파에 2명씩)을 고려하여 임명하려고 노력했다. 공청단, 즉 공산주의청년단 활동을 통해 권력에 등장한 리커창과 왕양(중국 전문가들은 리커창 총리의 실권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상해방의 한정(부총리)와 왕후닝(당의 핵심 사상의 설계자), 그리고 시진핑 자신이 등용한 인물들인 자오러지(중국공산당 중앙기율 검사위원회 위원장)와 리잔수 등이다.

해외 중국전문가들도 중국의 헌법 개정이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경제의 발전과 그 혜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혁이 결정적으로 후퇴했다는 점, 시진핑이 '마오쩌둥 식으로' 새로운 개인숭배를 만들고 있다는 점, 소위 '당 국가'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적, 민주주의적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 정치전문가들은, 사실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는 없지만, 헌법 개정이 덩샤오핑의 유훈으로부터 후퇴한 것이라는 점, 당정 분리노선을 중단했다는 점, 권력 찬탈을 시진핑이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 현대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아직 남기지 못했음으로 그 시도는 시기상조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나 해외에서 헌법 개정을 지지하

는 학자들은 시진핑이 '아무 것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덩샤오핑의 유훈은 유훈일 뿐 법률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중국의 현대 역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라는 위치는 항상 의례적 성격이 강했으나 지금 시진핑은 이 직위에 현실적 무게를 부여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시진핑은 법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로부터 하위 당원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 전체, 그리고 중국 전역의 말단 하부조직 모두를 포함하는 전 영역에 걸쳐 반(反)부패 사업을 진행하도록 전권을 위임 받은 국가감찰위원회를 조직했다. 중국이 세계로 그 시선을 넓히고 있는 만큼 외무성의 역할이 상향 조정됐다. 가장 민감한 경제·재정 문제(지방 정부와 국영기업의 부채, 국가부문의 낮은 효율성, 재정 투명성과 통화 완전자유화에 기반한 금융 안정화 등)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중앙은행 총재와 국가 경제정책 브레인에 시진핑은 미국에서 수학한 전문가들을 임명했다.

당을 우선시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시진핑 개인의 권력을 더 확고하고 공고하게 해주는, 당과 국가 간의 균형이라는 기존의 당정 분리를 당이 영도하는 국가, 다시 말해서 국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분명히 한 것은 적지 않은 위험요소를 내포한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은 심중팔구 경제성장 속도가 자연스럽게 둔화될 것이다. 시진핑 개인의 손에 권력이 철저하게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면 중국공산당과 중국 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시진핑에게 물을 것이다. 반대로 시진핑이 내부적으로는 환경, 의료, 교

육 등 '삶의 질'을 개선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지도자임을 확실히 한다면, 권력 내부에서 그의 위상은 확고해질 것이며, 공산당이나 중국의 정치상황도 안정될 것이다.

아직은 헌법 개정이 탄탄한 경제력과 잘 호응하고 있다. 2017년 GDP 성장률은 계획했던 것보다 0.4 포인트 높은 6.9%에 달했으며, 2018년 GDP 성장률은 6.5% 수준이다. 국내총생산량은 2017년 12조 달러(세계 GDP의 약 15%)이며,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 측 평가에 따르면) 30%에 이른다. 이는 중국이 국방비를 8.1%, 화폐로 따지면 1750억 달러(미국 수준의 약 1/4)까지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했다.

2018년 중국의 국가예산은 부족하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GDP의 2.6% 수준이다. 2017년보다 0.4 포인트 더 낮았다.

국방비 증가는 최근 중국 최고지도부 내 '우주항공파'가 약진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민간 및 군사 우주항공 분야에 종사하면서, 중국 최고지도부로부터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는 군인, 학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아우르는 세력이 중국 권력의 상층부로 대거 진입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의 대외정치 상황은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다.

미중 관계가 첨예화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통해 사실상 대외적으로 천명된, 세계 시장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국이 목표로 하는, 당이 영도하는 국가의 건설을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명백하게 인

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미국의 이익, 경제, 가치에 대한 도전들' 중 하나라고 불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무역, 군사, 정치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출품에 대해 추가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전략에 맞서 인도-태평양 개념을 정치-외교 노선으로 채택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안보전략으로 미국-일본-인도-호주를 연결하는 소위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를 발동시켰다. 중국은 2018년 초에 시작된 미국과 베트남의 해상군사협력(베트남 다낭 항에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 호의 입항)을 자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양안 문제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 미국 사이에 공무, 행정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던 날카로운 말들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미국은 여전히 불만이 많다.

반면에 트럼프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은 임기제한을 철폐한 시진핑의 결정이나 서구의 비판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새로운 압박에 대해 중국은 다층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이전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새로운 정치캠페인에 돌입했으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미국 최우선주의' 이름으로 수행된 정책들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점을 중국이 잘 이해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갖은 노력을 시도했다.

그런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시진핑은 장기집권의 토대를 놓은 중국의 절대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중국은 동시에 일명 '무역전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천명했다. 여행, 자동차, 농산물과 같이 미국의 민감한 주들에서(트럼프 찬성투표자의 이해 지역)에서 생산된 미국 상품에 대해 중국은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을 철폐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베트남 군사-해상 협력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프랑스와의 해상군사협력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프랑스 구축함이 참여하는 홍콩해역에서 합동해상군사훈련).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이후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핵 폐기와 관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대응전략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미국에게 분명하게 시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결정이, 늘 그렇듯 실제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은 냉혹했다.

현 시점에서 미중무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양국 사이의 무역이 실제 축소되고 그 결과로 중국이 손해를 입는다면, 중국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유럽,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상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이 유럽공동체(EC)의 경제를 잠식해가고, 특히 동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유럽공동체는 내심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불만에 덧붙여 정치적 불만이 첨가됐다. 유럽 제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주석직의 임기제한을 철폐한 것은 중국이 '민주주의 전통으로부터 후퇴'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자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논평 대신에 중국은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나아가 전체 유럽공동체에 무역투자협력이라는 전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중국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주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며, 자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유럽국가들의 장기경제프로그램을 '결합'하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이니셔티브는 다시금 프랑스에 넘겨진다.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좀 더 치열한 해상군사경쟁 단계로 접어들었다. 인도와 이란은 이란의 차바하르 항 운영권을 인도에게 임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인도가 해상군사 목적으로 임대한 이란의 차바하르 항은 중국이 자국의 해상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에서 불과 9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인도가 인도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행보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중국은 유럽, 특히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와의 해상군사협력, 그리고 러시아와의 해상군사협력을 통해 4자 안보대화(4대)에 대응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대외정치 분야에서 러시아와 관계는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러시아와 정치,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단기적

으로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는 무역문제, 유럽과는 정치와 민주주의 이념 문제, 인도와는 군사문제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갈등이 첨예화 되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개연성 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 유럽공동체, 인도와 갈등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각 갈등 당사자 간에 각각 해결해 가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을 자기만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대(大)유라시아'라는 개념은 4자 안보 대화와 일대일로 사이에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중국은 이해한다. 그러나 대유라시아를 통해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대한민국, 인도를 이용하여 러시아 경제에서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잡으려는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 시각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발전해 가는데 아직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

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와 중국 관계의 지형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글로벌 리더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신뢰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공동체와 같은 세계주도자들과 1:1 양자관계를 구축하고 개별적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약화될 것이며, 중국을 배려하려는 러시아의 태도는 점점 시들해질 것이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하려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와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이후 시진핑이 중국 내의 완전한 정치적 독점권을 장악하고 중국 지배층의 절대적 지지를 획득한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선택지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덩샤오핑 이후 신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적 목표를 글로벌 리더로 설정하고 이를 중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진핑은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 김은희, 한국외국어대 강사

loveruli@hanmail.net

- 바실리 미헤예프(V.V. Mikhee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세르게이 루코닌(S.A. Lukonin) 경제학 박사, IMEMO 중국 경제정치 부장
- 원제: Китай: внешний фон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изменений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8.3.31)

서구 주도의 러시아 제재와 일본의 참여, 그리고 러일 경제관계

비탈리 슈비코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정치제재는 대부분 2014년 3월에 일어난 사건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크림지역을 합병하면서 이에 대해 서구 제 국가들이 취한 집단적 조치와 그 궤를 같이 한다. 2014년 4월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비자완화, 투자협력 및 우주개발협력, 무력행위 중단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진행하고 있던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
- 크림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 23명의 러시아 관료에게 비자 발급이 금지되며 그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 러시아가 크림을 합병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나 기관의 자산을 동결한다. 자산 동결에 포함된 인물이나 기관은 대부분 크림 지역의 친 러시아 계열의 기관이나 열렬한 러시아 지지자, 그리고 러시아 정부 관료들이다.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러시아에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우크라이나 남동지역의 상황이 첨예화됐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밝혔듯이 일본은, 미국이 확신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상황의 불안정화’에 가담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제를 무시하고 자체 권력을 선포한 러시아 관료나 대표자들의 이름을 명단에 추가했다. 이때부터 일본의 제재 명단에는 큰 변화 없이 66명의 개인과 16개 기관(독립을 선포한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포함해 크림 지역에 기반한)이 올라왔다. 이외에도 미국의 선례를 따라 일본은 4개 러시아 국가은행(스베르뱅크, VTB 은행, 가스프롬뱅크, 로스셀호즈뱅크)과 ‘브네슈에코노미뱅크’(Внешэкономбанк)라는 브랜드로 사업하는 국가발전조합의 유가증권이 일본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명단은 외무성이 작성했다) 제재 명단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 명단에 포

함된 자연인과 법인이 일본 내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자산을 이용하여 행하는 모든 거래(대금지불방법과 액수, 수출입 거래, 신용장 발급, 투자금 모집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에 대해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 결정권(거래 허가 또는 금지)은 재무성에 있다. 재무성은 모든 거래의 실행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거(국가안보에 유리하고, 인본주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만 충분하다면, 허가제는 제재를 가하라고 일본 정부가 자신들에게 부과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성이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나 기관들의 거래를 허가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무성의 허가 없이,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물 또는 그들이 소유한 자산과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다면, 거래책임자는 벌금 등의 제재에 처해진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채택된 일련의 제재 이후, 러시아 시민이나 회사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조치도 일본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대(對) 러시아 제재가 발효된 최근 4년 동안 일본 정부는 제재 내용을 확장하거나 제재 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는 어떠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제재를 받는 인물들이 러시아 내에서 행하는 위치나 역할까지 제재의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시작될 무렵 국가두마 의장이었던 세르게이 나리시킨에 대해 미국과 EC는 러시아 내 개인적 지위에까지 제재를 가했지만, 2015년 5월 국가두마 의장의 자격으로 나리시킨이 일본을 방문하는 데는 전혀 지장

이 없었다. 2015년 9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 니콜라이 파트루세프가 일본을 방문할 때도 일본 정부의 태도는 그대로였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와 경제, 정치 관계를 제한하자는 'G8' 국가들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이 기간에 채택된 모든 국제문서에는 일본 수상이나 외무장관의 서명이 날인돼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앞서 언급한 러시아 시민들의 이름을 명단에 계속해서 포함시키는 것 외에 어떠한 구체적 조치도 일본정부는 취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러시아의 여러 기관들과 접촉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접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일본 국가기관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고발하거나 행정절차를 통보한 경우도 없다.

반대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 접촉을 활성화시키고자 신용장을 발급하거나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공동출자의 형식으로 국가자금이나 법인지금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렇듯 일본은 일본대외경제협력기구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극동 및 바이칼 지역발전기금과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 극동지부와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특별경제지구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플랫폼 설립에 참여했다. 또한 JBIC는 러시아 내 사업 계획을 실행하고 이를 재정적,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플랫폼 설립과 관련해 직접투자 함으로써 러시아펀드의 파트너로 나섰다. JBIC는 스페르반크와 업무 교류를 계속하고 있으며, '야말 LNG'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와 무관한 러시아 지역 은행들과 우호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정부의 공신력 있는 인물들이 일본의 여러 은행에 ‘권고’했다고 언론이 정보를 흘렸다. 에너지 분야에서 일본 정부는 러시아 프로젝트에 여러 형식으로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 해당부서와 의견을 조율하라고 자국 회사에 종용하고 있지만, 회사들은 이런 제안에 냉담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섰다. 일본 정부가 발의하여 2016년 9월 러일경제협력촉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됐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러일 양국 간에는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건설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특별한 입장’은 ‘G8’의 다자간 회담 중에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고위급 회담이나 라운드 테이블에서 일본 대표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를 조정하는데 있어 서구의 입맛에 맞게 러시아에 추가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 우선하는 과제임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본 대표들은 러시아 여러 지역들과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발의를 주도하는 것은 ‘보통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팽창주의적(일본의 공식 관점에 따르면 ‘수정주의적’) 대외정치 전략이라는 러시아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처한 이와 같은 특별한 입장은 러시아 제재라는 민감한 문제에 일본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일본 정부를 어느 정도 벗

어날 수 있게끔 해주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자국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 예를 들어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정책을 바꾸라고 러시아 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러시아와 공식적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자국 대외정책의 우선 과제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일본이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접촉면을 갖거나 유지하려는 행동에 ‘제동’을 걸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비밀스럽게 또는 공공연하게 저항했다. 그러자 2015~2016년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미국이 일본에 동맹국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중국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흘러나왔다.

대(對)러시아 제재, 그리고 제재의 확대와 실행에 일본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일련의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얽히고설킨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에, 그리고 북한이 핵무장 하면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의 항구적 위협이라는 문제에 일본 정부가 대외정책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대중매체와 여론은 대단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對)러시아 제재는 일본이나 일본의 이해와 동떨어진 그 무엇으로 인식되면서 서구와 일본이 갈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2014년 대(對)러시아 제재의 명분이 됐던 ‘가치 외교’에 대해 일본은 대단히 회의적이었으며, 심지어 영토란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과 연관돼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인식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일본 정부기관

들이 대(對)러시아 제재를 수용한 것은 일본과 서구의 연대성을 단순히 대외에 보여주려는 차원에 국한되는 제한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러일경제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손해도 없다. 그렇다고 향후 제재의 폭이 확대되고 그 방법이 보다 철저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러시아에 경제적 제재를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는 절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은, 미국 정부가 '제재' 명단에 포함한 러시아 기관이나 인물과 협력을 유지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 기업이나 그 자회사에 규제를 가하려 할 때 맞닥뜨리게 될(그리고 실제로 맞닥뜨리고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일본 기업들을 구제해 주지 못하며, 그 위험성을 현저히 경감시켜주지도 못한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방어막이 되어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 고위 관료들이 자국 회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의 결과가 어떨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성명뿐이다.

일본 경제의 위험성은 주로 대기업과 관련돼 있다. 러시아에서 일본의 경제행위는 대부분 대규모 다국적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각 지역에 지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럽이나 북미의 지사들은 러시아와 '민감한' 기술이전 협력을 추진했다는 의심을 받아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은 기술이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래 체결 시점을 미국 법률회사나 법률서비스들과 개별 컨설팅이 종료될 때까지 연기하고자 한다. 왜냐하

면 거래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일본의 대기업이나 은행들은 향후 제재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는 러시아 회사들에게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자제하고 있으며, 독이 될 수 있는 거래는 되도록 거리를 두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제증권시장, 특히 런던증권시장에서 러시아 회사들과 은행들의 해외증권 발행을 도와주었던 투자는 행 중에 일본 회사는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미국 교역파트너에 대한 사업 의존도 매우 높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끈질긴 압박에 노출돼 있으며, 미 재무부의 (이차) 제재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피하고 있다. 기업의 독자적인 사업 결정으로 이차 제재를 받는다면 그 손실은 엄청날 것이며, 그들이 러시아와의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소한 이익을 압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조정할 때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러시아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일본 정부의 노력의 결과마저도 이차 제재로 인해 손실이 엄청나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 당국이 러시아 사업가 데리파스키와 벡셀베르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4월에 공표하자마자 일본 알루미늄 수입자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반응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러시아 사업가들을 SDN의 제재 명단에 올리자마자 미쓰비시, 마루베니, 미츠이, 수미토모를 포함한 일본의 가장 큰 알루미늄 구매자들은, '루스알'사의 알루미늄을 수입을 중단했다(미 재무부는 SDN 계열사의 파트너들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

향후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재는 무엇보다 러미 관계,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것인지에 달려 있다. 만약 '서구 전체의' 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할 경우,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나 과제 설정 없이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우 지엽적이고 무엇보다 매우 형식적으로 참여했던 일본의 제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본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 흐름에 동참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서구보다 더 빠르게 제재 해제의 수순을 밟을 것이다.

러시아와 서구의 관계가 제재라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일본은 자국에 유리하게 영토분쟁을 해결하려는 기대감과 이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대(對)러시아 제재의 실행 수준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을 것이고, 설사 실행된다 하더라도 제재의 수준이나 효과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 일본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 제재를 방해할 것이다. 일본 정부기관들은 특별한 주의를 요할 필요 없이 형식적으로 채택된 제재가 현실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도록 그리고 현실화되더라도 결과가 미비하도록 국제유관기관들의 플랫폼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항상 대단히 폐쇄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문제, 제재 해제와 제재 유지 사이에서 무엇이 더 유리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서서히 강해지고 있다. 영토분쟁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입장이 더 냉담하고 완고해졌다는 점, 서구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행로를 더 긍정적으로 검토(적어도 공식적 공간에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를 변화시킬 유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일본 정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와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사이에서 줄타기로 이어질 것이고, 일본 정치의 일관성을 객관적으로 흔들어 놓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일본의 대외정책 문제를 풀어갈 잠재적 수단이라는 관점이 약화된다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일본의 저항은 객관적으로 약해질 것이며, 대(對)러시아 제재에 있어 일본의 입장은 미국과 좀 더 협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다.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여 러미 대결이 강화되는 구도 하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일본의 대(對)러시아 입장은 보다 강경해질 것이다. 일본과 미국 관계는 그 양과 질에 있어 러일 관계의 그것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런 점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 가능하게 한다. 안 좋은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확고한 원칙에 따라 대(對)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일본 내에서 극히 소수이며, 일본 사회 내 주류 여론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그 목소리들은, 만약 반(反)러 경향이 현실화되면, 저항의 몸짓을 보일 수 없을 것이다.

번역: 김은희, 한국외국어대 강사
loveruli@hanmail.net

- 비탈리 슈빗코(V.G. Shvydko) IMEMO 일본연구센터 소장
- 원제: Участие Японии в западных санкциях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и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8.6.15)

아태지역 통합 문제와 전망

알렉산드르 포도롭스키

아태지역 국가들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합의서에 서명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대체할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장에서' 미국이 불참(트럼프 행정부가 TPP로부터 탈퇴를 결정한 후) 한 가운데 11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실행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명칭 수정안이 승인돼 이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명명된다. '점진적(진보적)이란 용어가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산업성 장관 토시미추 모테기의 말에 따르면, 합의 참가자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 비교해도 가장 진보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모테기나 그의 견해에 동조하는 인물들이 예측하고 있듯이, 'TPP-11의 설립은 TPP-12의 부활 및 더 확대된 합의로 나아갈 것이다.'

더불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중국의 '일대일로'를 비롯한 대체 프로젝트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은 지역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심중팔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엇보다 양자경제합의를 통해 많은 결과물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양국경제회담과 회담의 합의사항이 아태지역 통합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017년 APEC 정상회담에 관한, '다낭 APEC 제25차 정상회의: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향해'라는 기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T) 설립 구상'을 지지한다고 천명한 후 베트남과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합의, 중국과 경제무역협력 합의에 대한 회담 종결, 싱가포르와의 회담 시작, 아세안과 자유무역합의서 체결 모색 등을 언급했다. 그 외에도 이 기사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발

의안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토대 위에 대(大)유라시아 동반자관계 수립 구상이 제기되고 있다.

APEC에서 언급된 제안들이 어떤 규모로 통합될 수 있을지를 예견하기는 아직 어렵다. 다낭에서 채택된 선언문에는 ‘APEC 포럼은 지역 및 글로벌 경제성장과 통합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서의 역할, 지역경제 건설을 주도하는 역할을 유지한다.’는 것이 확인됐고, ‘2020년 이후 기존 회원국들과 더불어 APEC 포럼의 활동을 함께 할 미래 APEC 그룹을 창설’하자는 논의가 승인됐다. APEC의 틀 안에서 아태지역을 통합하기 위한 실제 작업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향후 2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전략은 여러 단계를 전제로 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켜 개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양자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삼자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나 소(小)지역적 기반에 바탕 한 합의의 체결이다. 세 번째 단계는 APEC을 포함해서, 광의의 지역적 성격 또는 글로벌한 성격의 합의서나 메가-프로젝트의 체결이다. 또한 체결되는 합의서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은 아태지역 공간의 통합 설계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계획안이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가, 다시 말해서 시장개혁과 얼마나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이 양자 합의를 선호하는 것은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세계 무역기구(WTO)가 진전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는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 대한 지지를 거부한 것은, 중국이 이 협정의 영향력 밖에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미중 무역관계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가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한국과의 양자관계 재검토 계획은 매우 상징적이다. 첫째, 트럼프의 경제 전략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시대의 가치로서 부상하고 있는 숫자경제를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두 국가 사이에 적용해보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한미 FTA 재검토안을 발의하면서 미국은, 한국시장에 미국 자동차 진입과 같은 기존의 케케묵은 문제들 이외에도, 시험적 성격의 프로젝트로서 새로운 조건 하에서 양국 동반자관계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먼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행정적, 경제적 메커니즘, 그리고 해당 법률을 살피려 할 것이다. 특히 전문가 수준에서 이루어질 최종 합의서에 숫자경제의 최종 결과를 조율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양국 간 경제 합의는 양국 간 동맹국 합의서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해야만 한다.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정치 현실(중국의 영향력 확대, 새로운 안보 위협요소의 증가) 때문에, 미 행정부는 미국 이익 최우선주의라는 프레임을 통해 검토되는 경제적 동반자관계와 동맹국 합의서의 내용, 이 둘을 결부시키려 한다. ‘안보와 경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제안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우선시 하려는 전략은 안보와 경제라는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지역 맹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려는 미국에게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를 강화하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리고 미국-인도의 관계 강화는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상호협력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주의 블록'은, 공식적으로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태지역 국가와 인도 사이에 무역과 투자, 그리고 혁신기술 공유가 아직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결과 이 지역 발전에 인도의 영향력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래서 트럼프 이후 미 행정부 역시 인도의 경제, 정치적 잠재력을 고려하여 기존 노선을 변경할 수는 있을지라도 미-인도 협력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지역이 향후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아시아 경제에서 그 규모 상 1순위, 2순위, 4순위를 차지하는 국가들 사이에,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간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싼 협의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과 상당 부분 연계될 것이다. 이때, 2015년에 있었던 중국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중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비록 짧았다 하더라도, 그 경험은 이와 유사한 합의서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다낭 APEC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지역적 협력과 아태지역의 통합 전망에 대한 보고서는 상당히 일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는 2020년까지 보고르 합의서 이행이 요구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 그리고 2016년 리마에서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T)로 이행하기 위한 지금까지 준비된 기본 원칙과 메커니즘이 발표됐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다른, 좀 더 야심찬 문제 설정을 고려하기란 아직 어렵다.

리마 FTAAT 선언은 자유무역 지대에 대한 기본합의의 범위와 방향을 정했다. 이 선언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진 구상과 제안을 토대로 한 계획안이 발표됐다. 회담의 주요 의제로 세율과 비세율 조정, 서비스 무역, 투자량 관리 규범, 수출 상품 원산지 결정 규칙 등이 채택됐다.

지역 무역과 투자 변동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것은 한편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설정하는 원칙과 규범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무역 확대와 투자교환이라는 앞으로 있을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이에 맞는 합의를 준비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하는가. WTO의 규범들인가 아니면 FTAAT의 이익인가. APEC 회원국은 향후 회담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APEC 회원국들 사이에 기존의 양자 간 또는 다자간 FTA를 단일한 합의서, 다시 말해서 전체 아태 지역에 실효성을 갖는 단일 합의서로 통합하려는 계획에 대한 밑그림은 아직은 뚜렷하게 그

러지지 않았다.

방향은 분명했다. 기존 합의서의 내용 중 어떤 차이가 있고, 모순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살살이 검토하고 살펴야 했다. 2017년 APEC 정상회담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현행 합의서상의 모순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내용을 가다듬는 작업을 WTO와 조율하면서 새로운 규범들(차세대무역투자이슈, next generation trade and investment issues)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쪽으로 노선을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FTAAT와 관련해 어떤 원칙을 채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원칙을 배제할 것인가 하는 복잡 미묘한 이해관계로부터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출된 합의만으로도 통합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역 맹주의 서열이 바뀌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제 많은 것은 아태지역의 가장 큰 경제대국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이제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대답은 아태지역의 발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합의된 행동들일 터이다. 위에서 언급한, 새로이 부상하는 숫자경제를 고려해 상호 호혜적 조건들을 보장하는 것도 그런 행동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018년 뉴기니 APEC 정상회담에서는 숫자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주제가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합의된 접근법이 아직 마련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APEC에 가입한 21개 회원국 모두가 숫자경제로 가기 위한 통일된 조건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작업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회원국이 낙후된다면 점점 빠르게 현대화되는 새 질서와 여기에 기반한 통합과정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식 접근법은 양자의 기반 위에서 단계적 문제해결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아태지역의 주도 국가들 간에 벌어지는 역동적인 정치적, 경제적 과정들은 이 지역 국가들의 상호관계 전망 및 지역 통합 과정에 매우 깊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태평양 지역에 편중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우선적으로 2018~2020년의 핵심적 경향에 불가피하게 반영될 것이다. 이 과정은 심중팔구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이고, 뒤처짐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여러 문제에 대한 강경과 완화라는 미국 입장에도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변화된 정책기조는 메가-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지역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특히 TTP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정, APEC 내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기존 관점으로부터의 후퇴, 양자 무역, 경제 합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 등은 다자간 합의가 갖는 잠재력을 불가피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상쇄하면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인도가 앞으로 국제경제과정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며,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의한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을 점차 진전시키려 할 것은 자명하다. 이런 면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노력은 여러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

연합(ASEAN) 회원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동시에 RCEP,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안적 프로젝트들도 고려해야만 한다. ASEAN 회원국들 역시 지역 통합을 고려하여 자국의 잠재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중국, 한국, 일본의 3자 회담도 계속될 것이다.

지역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은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FTAAT를 진전시키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일대일로’ 전략을 현실화하는데 국가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다. 자국의 메가-프로젝트를 현실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 중 잠재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수립하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직면한 대외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중국은 RCEP 회담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이외에 2018년 지역 통합 의제에는 TTP 프로젝트를 부활하려는 계획도 포함됐다. TTP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대단한 파트너가 ‘경기를 탈퇴’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새로운 조건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낭 정상회담 ‘장에서’ 발표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11개국이 준비해온 노력의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1개국은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명명되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TTP

를 현실에서 구현하려 하고 있다. 아마도 회담 참가국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메가-프로젝트가, 일본이 전망하듯이,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가장 진보적’이 될 수 있는지, TTP-11이 TTP-12의 부활이나 합의서의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결정들을 지금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11개국이 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는 향후 행동의 방향을 설정할 ‘여행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여행지도에서 많은 부분이, 미중 양자경제회담과 그 후속 합의가 아태지역의 통합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중 양국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만과의 관계 증진,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제재는 단기적 전망에서 보면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분위기를 낳고 있다. 비록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상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수요가 있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서로가 허용할 수 있는 결정들을 모색하도록 양측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APEC 포럼은 지역 및 글로벌 경제성장과 통합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서의 역할과 지역경제 건설을 주도하는 역할을 유지한다는 2017년 APEC 정상회담의 선언은, 2020년 이후 기존 회원국들과 더불어 APEC 포럼의 활동을 함께 할 미래 APEC 그룹을 창설하자는 사업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갖게 될 것

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거부되지는 않았지만, FTAAT 역시 즉각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메가프로젝트를 대체할 대안적 프로젝트, 예를 들어 ASEAN의 지역 역할 증대 프로젝트나 RCEP 합의서 정교화 작업 등은 현재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핵심 메가-프로젝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약간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대안적 프로젝트에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FTAAT나 다른 통합프로젝트에서 논의되는 통합개념을 하나로 모아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해 여러 행정적, 경제적 장애물을 쌓아올리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식으로 대응해서만은 안 된다. 세계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을 찾고, 중국과 합의를 이끌어내며, 동맹국들의 이해도 배려하는 등 국내외 시장에서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가야 한다. 이때서야 비로소 경쟁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주체는 바뀐 세계무역기구이던, 또는 아태지역의 통합된 메가-프로젝트이던 국제합의 내에서 상호관계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다른 태평양 국가들은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자국의 지역

적 선호도를 결정할 것이다.

TTP가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논의되고 있는 RCEP의 윤곽도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은 대립하는 힘들을 중재하고 대화로 이끌어내는 APEC의 역할을 기대케 한다. TTP와 RCEP뿐만 아니라, FTAAT를 APEC의 범위 밖에서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APEC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언제든지 외교 채널을 가동할 수 있게끔 회담 공간을 항상 운영하는 회원국에게는 '의사 일정에 남게 될'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가까운 미래 아태지역 국가들, 특히 동남아국가들과는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일본, 인도와는 경제관계를 발전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외무역 교역과 투자량을 확대하고,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며, 대외경제관계의 구조를 개선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APEC을 포함해서 아태지역의 통합 메가-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러시아가 갖게 될 것이다.

번역 : 김은희, 한국외국어대 강사
loveruli@hanmail.net

·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A.N. Fedorovskij) IMEMO 아태지역연구센터 부장
· 원제: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интеграции в АТР
· 출처: IMEMO 심포지움 발표문(2018.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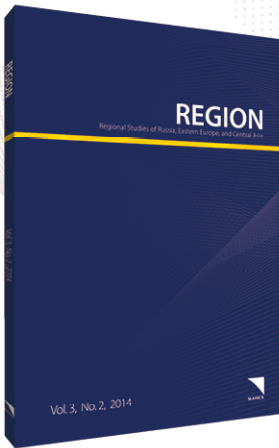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GION

REGION is a peer-reviewed international journal that explores the history and cur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airs of the entire former Soviet bloc. In particular, the journal focuses on various facets of transformation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in the aforementioned regions, as well as the changing character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rest of world in the context of glocalization.

Russia·Eurasia Focus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 Russia-Eurasia Focus」는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은 온라인 칼럼입니다.



2018

Vol.2 | No.2 Summer

Russia Policy Review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031-330-4852 FAX.031-330-4851
81, Oedae-ro, Mohyeon-eup,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35, Korea <http://www.rus.or.kr>